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일 시 _ 2013. 7. 5(금) 오후 2시

장 소 _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최 _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_ **HYUNDAI**
MOTOR GROUP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 차

1. 프로그램 (식순) / ii

2. 인 사 말 / iii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3. 축 사 / v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세계노년학회 회장 / 본 연구회 고문

오영숙 전 전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4. 주제발표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 1

5. 토 론 자

1) 김정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 15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 19

3) 이창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 25

4) 유종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 35

5)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57

6. 부 록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및 토론회 관련 기사 / 63

프로그램

■ 1부 사회 : 정윤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인사말씀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4) 참석자 소개 사회자
- 5) 축 사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세계노년학회 회장 / 본 연구회 고문
오영숙 전 전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1) 주제발표 :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 2) 토론자
 - (1) 김정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 (2)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 (3) 이창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 (4) 유종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 (5)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3) 참관자 질의 / 응답
- 4) 총마무리 발언 : 안상훈 교수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한동안 마른 장마로 이른 무더위로가 계속 되었고 올 해도 국지성 폭우와 폭염이 예상 될 것 같은데 건강 유의 하시고 피해가 없이 여름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중 제일 바쁜 금요일이고 제일 바쁜 오후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축사를 해 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최근 세계노년학회 회장님이 되신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과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님 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자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이 높다 보니 그에 따른 과제와 정책에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내 140개 국정과제 중 40개를 중점과제로 선정했고 그 중 40개 과제는 경제 의제이고 나머지는 복지 민생 과제로 ‘공약가계부’를 만들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고용률 70% 달성과 복지 공약 이행비용 135조원 마련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굳은 실천의지를 거듭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중소기업을 살리는 정책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과감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창조경제를 역설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을 역점 치적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게 됨을 물론이고 우리나라가 선진복지국가 대열 합류를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 희망과 기대를 크게 가져 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지난 5월말 한국을 방문한 창조경제 개념의 선구적 창시자인 영국의 세계적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John Howkins) 교수는 “이스라엘의 모델만을 좇지 말고 한국만의 강점을 살린 창조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라”고 조언한바 있듯이 한국형 복지모델을 모색하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에서는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복지 거대 담론 형성을 위해 창조경제와 여러 학문과 분야의 융합적 사고와 결합이 어떻게 함께 모색이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제발표를 해 주실 안상훈 교수님은 최고의 이상적인 선진복지모델인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였지만 스웨덴을 무조건 모방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모델을 일찍부터 주창 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현

정부 출범 전부터 이일에 관여 해 왔고 현 정부 탄생과 함께 인수위 위원으로 역임했으며 지금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토론자분들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주창 해 온 대표적인 진보경제학자이신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님, 일 주일 전 스웨덴, 덴마크를 다녀오신 이창준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장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님이신 최균 교수님, 삼성경제연구소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으로 고령자경제활동, 은퇴, 노인 건강, 노인부양, 노인정책, 국제비교를 하고 있는 김정근 박사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안상훈 주제발표자님과 모든 토론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은 선진복지국가의 틀을 마련하여 ‘한국형 복지국가’ 탄생을 위한 생산적이고 활발하게 열린 토론회의 장이 될 것 같아 기대가 아주 큼니다.

거듭 이 자리에 참석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7. 5.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 정 숙

축 사

차 흥 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세계노년학회 회장 / 본 연구회 고문

축 사

사)선진복지사연구회가 주최하는 ‘창조경제를 위한 한국형복지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박근혜 정부 탄생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복지국가의 방향을 무엇이 절실한가를 잘 잡기위한 창조경제 국가를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서 ‘의무 없이는 권리도 없다’는 공정성을 기초로 한 창조 경제를 위한 성장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한국복지 전략을 서울대 안상훈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작년도 까지만 해도 몇몇 유럽의 국가들과 그리스 국가에는 복지정책으로 인한 문제들이 국가성장에 많은 문제점을 가져 왔으며 심지어는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스웨덴 국가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시대가 변화 해 감에 따라 복지제도는 국가가 사회와 필요성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 문제 해결을 하느냐, 우리사회가 안정 될 수 있는 국민복지 패러다임이 얼마만큼 잘 되어가고 있으며,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의 소득보장과 생활보장은 잘 되어 가고 있는지, 일자리 창출이 잘 되어 있는지, 얼마 전에는 기초생활연금 문제도 국가 복지 지출이 국가 예산에 부담을 준다 하여 범위를 내리는 방향등을 조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새 정부의 어려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복지정책은 국가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성장되어 있느냐는 국민들이 일한 만큼 조세의 의무를 다 했느냐, 다시 말해서 ‘의무 없이는 권리가 없다’에서처럼 각 기업체, 각 기관 등,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이 사회 보장 발전에 기여 했을 때 무엇보다 의무와 권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어, 우리의 국가는 튼튼함과 동시 경제성장을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의 정책은 국민들의 자유로운 충족을 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와 복지제공과 고용창출에도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복지전략은 어떠한지, 다양한 복지 전략을 특히 북유럽형의 복지전략인 보편주의를 기초로 할 것인지, 대륙유럽형인 보편주의의 전략적인 보수주의 체제인지, 아니면, 영미 형 선별주의적 자유주의 체제인지의 많은 사례를 통해서 한국의 복지전략에 맞는 동일성과 상이성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복지를 제공 하고 받을 수 있는 타당하고 공정하고 모든 사람을 가장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복지 정책의 전망은 사회서비스의 고용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창출이며, 이로 인해 고용 창출이 늘면 선순환 시작이 되고, 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복지 지출이 줄고 세금이 많이 거두어 성장물이 올라감과 동시 여성 일자리 창출, 노인 빈곤 문제 해결, 건강 보험의 보장성을 생활체육으로부터 예방적 건강 서비스, 복지 전달의 제 구축, 부담수준과 복지 수준을 맞추어 나가며, 앞으로 있을 남북통일은 어떻게 대비 할 것인가, 우리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가 등을 앞으로서 창조 경제를 위한 한국의 복지 전략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답을 해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과 특히 주제 발표를 해 주신 해 주신 안상훈 교수님, 토론에 참석하신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님,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 연구소 소장님,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균 교수님, 삼성경제연구소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이신 김정근 박사님, 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선진복지연구회 임원들과 이정숙회장님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 영 속 총장

전 전세종대학교 / 본 연구회 고문

주제발표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안 상 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2013 ~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2013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위원
 2009 ~ 2010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기획부학장
 2009 ~ 2011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
 2006 ~ 2008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2006 ~ 200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2005 ~ 2007 보건복지부 주요정책과제 평가위원
 2005 ~ 2005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
 2002 ~ 2003 한국사회복지학회 총무분과위원장
 2001 ~ Journal of Societal and Social Policy 편집장
 2001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2000 ~ 2001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박사후 연수연구원
 1998 ~ 2000 스웨덴 옉살라대학교 사회학과 전임연구원
 1996 ~ 1997 스웨덴 스톡홀름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원

서론

1. 권리와 의무, 공정한 복지의 양대 기둥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에 관한 논쟁이 무척 뜨겁다. 특히 보편복지가 무상 복지와 동일시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복지란 것이 공짜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복지란 것이 궁극적으로는 ‘무상’으로 제공되기 힘든 것이며, ‘무상’으로 제공되는 복지란 것이 있다고 해도 본격적인 권리가 될 수 없거나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은 공정성의 기초로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경구이다. 그것은 바로 ‘의무 없이 권리 없다’라는 기본적 윤리이다.

보편과 선별을 어떻게 조화하느냐, 혹은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조합하는가를 정하는 것은 본연적으로 문화적임과 동시에 대단히 정치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정의 혹은 공정사회에 관한 모습은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동일할 수가 없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상대주의를 넘어서서 대략적으로라도 공유될 수 있는 복지국가의 가치들을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주로 공정사회를 이루기 위한 복지국가의 벽돌들을 이모저모 따져보았다면, 이 절에서는 공정사회의 핵심적 요소들에 관한 경험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상이한 복지국가 전략의 공과를 총체적인 면에서 타진해보기로 하자.

2. 공정복지의 실천적 의미와 세 가지 복지전략

사회정의에 관한 윤리적 차원의 이론적 논의들이 극과 극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자본주의가 순수한 형태인 경우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논의는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일찍이 영국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사자와 소를 위한 하나의 법은 억압이다”라고 일갈하였다.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 넣어 놓고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사자에게 밥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다. 여기서 칸막이를 만드는 복지국가의 역할이 필요해진다.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은 좋은 칸막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하는 것이고, 현존하는 다양한 복지전략을 공정사회의 잣대에 견주어 비교해보는 것은 우리의 것을 만들기 위한 좋은 본보기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복지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에스핑 안데르센은 세 가지 유형의 복지전략을 구분하였다.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주의의 이념에 따른 각각의 복지체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니면서 구분이 가능하다(Esping-Andersen, 1990).

먼저, 북유럽형 보편주의 복지전략인 사회주의 체제는 보편주의를 기조로 해서 시민권에 기초한 사회보장을 실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체제에서는 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본적 욕구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동시에 이 체제는 성평등적이며 노동운동의 전통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다음으로, 대륙유럽형 보편주의 복지전략인 보수주의체제는 사회보장 체계가 산업 부문별로 분절되어 있으며,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포괄적인 현금이전의 형태로 사회보장이 이루어진다. 이 체제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가 강하여 본질적으로 남성부양자모형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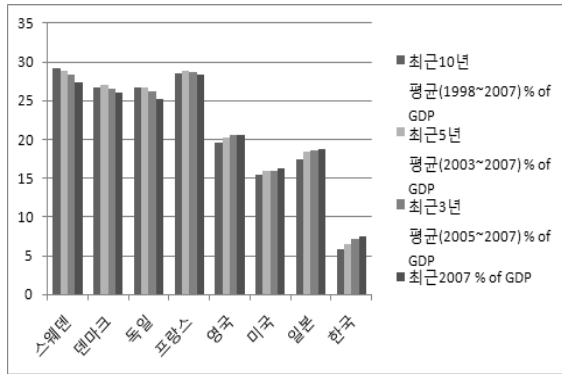
다음으로, 영미형 선별주의 복지전략인 자유주의체제는 부정적 의미의 선별주의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매우 부분적인 욕구만을 공공부조 중심의 복지를 통해 해결하며 사회보험이나 사회적 서비스는 크게 발달하지 못했다. 충족되지 못한 복지 욕구는 시장에서의 사적 보험이나 사적 서비스의 구매를 통해 해결하는 시장중심적인 체제이다.

이와 같이 복지전략이 다양하다는 사실은 인간들과 집단들에 대해서 어떤 면은 동일하게 대우하고 어떤 면은 상이하게 대우하느냐와 관련된 복지제공에서의 선택들이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것임을 의미한다(김기덕, 2002). 우리는 이미 앞에서의 논의를 통해서 자유지상주의로 갈수록 상이성에 입각한 대우를 강조하고, 집합주의로 갈수록 동일성에 입각한 대우를 강조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실제 수용 가능한 공정복지의 모습은 양자의 중간 지점에 위치할 가능성 농후하다. 문제는 인간과 집단들의 동일성과 상이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방식을 제대로 찾는 것이다. 결국 실천적인 공정복지의 준거는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도록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불평등한 처우가 요구될 경우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Frankena, 1973; 김기덕, 2002에서 재인용). 어떤 사람은 사과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오렌지를 원하는데 평등의 이름으로 사과나 오렌지를 획일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개별적인 욕구(needs)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옳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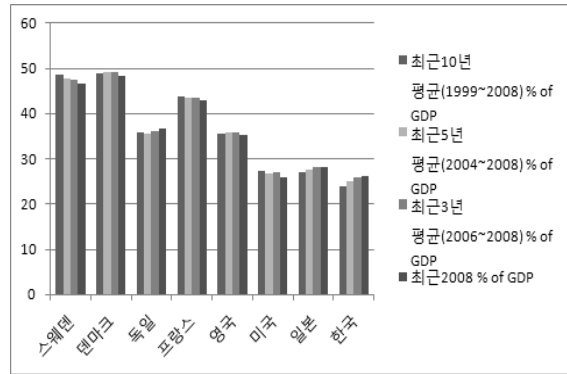
실용주의적인 혹은 중도적인 입장을 전제로 한다면, 공정한 사회의 복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녀야 할 것이라 기대된다. 첫째, 기본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 확고하게 담보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도 사회적 약자에게로의 분배가 좀 더 넉넉해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회의 허리를 구성하는 중산층을 지켜내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의 공정성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자유를 충족하거나 한 사회의 총복지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되도록 풍족하게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원에 입각한 창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가는 사회정의 고양을 위해 정의로운 수준의 조세를 통해 재분배를 시행하는 등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권리와 의무가 조화롭게 대응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을 설계하여 정치적으로 수용되는 재원마련을 담보하여야 한다. 이제 아래에서는 이러한 공정복지의 몇 가지 준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존하는 세 가지 복지전략들의 성공과 실패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기로 하자.

3. 다양한 복지전략의 성공과 실패

세 가지 복지전략을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로 나누어 보면 북유럽과 대륙유럽형이 보편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영미형이 주로 선별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편주의는 선별주의보다 돈이 많이 든다. 아래 <그림1,2>에서 확인 가능한 것처럼, 보편주의 유형에서 선별주의 유형보다 복지지출 규모가 두 배 가까이 크고 따라서 국민부담 수준이 훨씬 높다. 요컨대, 지속 가능한 공짜복지란 가능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전략은 크건 적건 그 규모에 맞는 국민부담을 전제로 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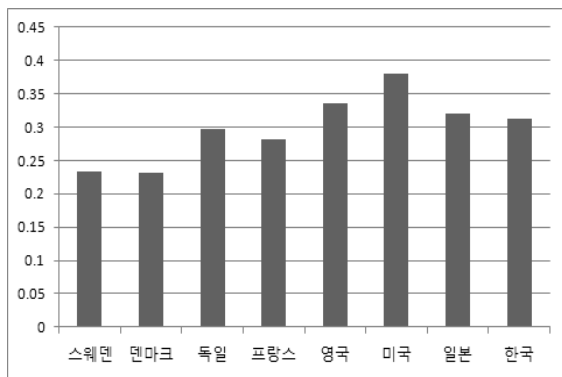


〈그림 1〉 사회지출 (OECD SOCX,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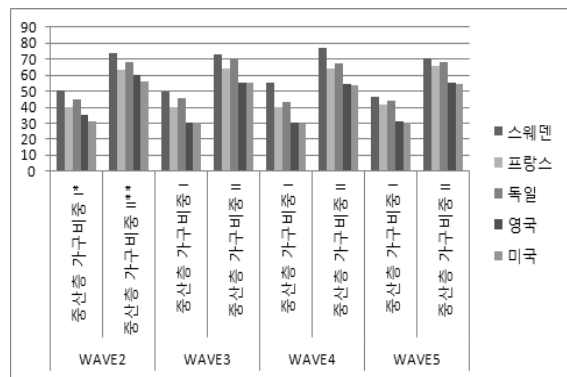


〈그림 2〉 국민부담 (OECD SOCX, 각년도)

우선, 한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얼마나 감소시키고 있는가를 따져보기로 하자. 사회의 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공정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큰 이견이 있기 힘들고, 따라서 이는 공정한 복지의 주요 항목이 아닐 수 없다. 〈그림3,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평등은 두 종류의 보편주의에 비해 선별주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지출 수준을 작게 유지하면서 결과적인 면에서의 평등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복지제공을 빈곤한 계층에 집중할 경우 대상효율이 증대되어 불평등이 효과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정책지향은 적어도 현실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중산층을 살리려면 복지국가를 되도록 작게 하면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현실에 존재하는 복지전략들을 비교할 경우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요컨대, 불평등 제거나 양극화 감소를 위해서는 복지지출이 상당히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지니계수 (LIS,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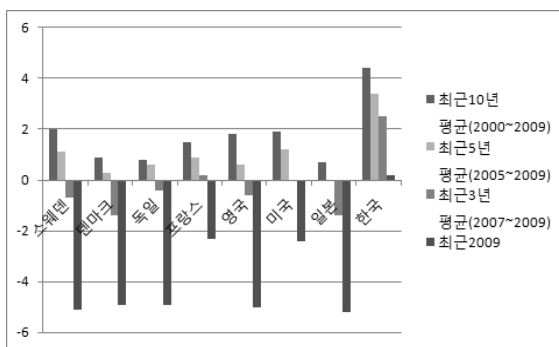
〈그림 4〉 중산층 비중 (LIS, 각년도)

- 여기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권리와 의무가 조화되지 않는 복지는 공정하지 않거나 지속가능하지 못하다. 복지와 부담이 고·고, 중·중, 저·저인 경우는 나름대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하다. 하지만 고복지를 시행하면서 저부담 형식을 취할 경우 세대간 불공정하거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진다. 이와 관련해서는 남미의 복지포폴리즘이나 근자의 PIGS 국가들이 많이 거론된다. 이들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반드시 복지지출에 기인한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적어도 경제위기 해결의 걸림돌로서 그들의 복지시스템이 일정부분 장애물이 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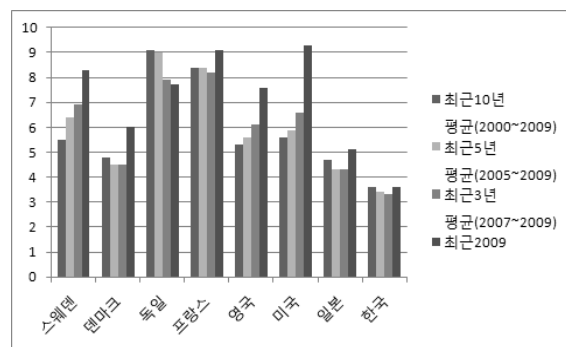
다음으로는 복지국가를 지속하기 위해서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경제적 성과를 비교해보자(〈그림5,6〉 참조).

한 때의 복지를 위해 미래의 총복지를 위한 생산을 포기하는 것이 공정치 못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항목이다. 이와 관련, 복지국가에 관한 반대논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복지가 사람들을 나태하게 만들어 생산의 발목을 잡는다는 주장일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회지출과 국민부담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과는 낮아져야 한다. 단, 비교에 포함된 나라들이 서구 선진국들이기 때문에 성장률 지표의 경우 개도국과 비교해서 낮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자.

여기서 드러나는 흥미로운 사실은 복지지출을 적게 하는 영미형의 성장률이 높기는 하되, 북유럽의 성장률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똑같이 복지에 돈을 많이 쓰는 보편주의를 택해도 반드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실업률의 지표를 비교해보다도 마찬가지로 결과를 얻게 된다. 경제적 성과를 좀먹지 않는 복지전략이 후세대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의 복지총량을 지속가능하게 한다는 면에서 공정한 복지의 잣대라고 한다면, 적어도 대륙유럽형의 보편주의는 좋은 평가를 주기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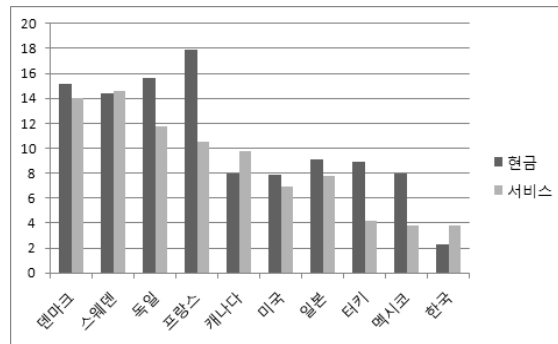


〈그림 5〉 경제성장률 (CWS, 각년도)



〈그림 6〉 실업률 (CWS, 각년도)

이러한 결과는, ‘복지병’, 즉 복지를 하면 경제에 악영향이 초래된다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같은 수준으로 복지에 돈을 쓰더라도 대륙유럽형과 북유럽형은 경제성과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왜일까? 전통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든 현금이전에 집중하든, 소극적 기제에 집중하든 적극적 기제를 동원하든, 동일한 욕구에 대한 기능적 등가물(functional equivalences)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인식하에, 행정적인 면에서 보다 관리가 용이한 방식인 현금이전형과 소극적 소득보장방안이 주로 채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효수요와 관련될 때, 두 가지 프로그램 방식간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소득이 일정할 경우 사회서비스를 통해 욕구가 해결되는 것도 가치분소득의 증가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암시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현금 대 서비스 혹은 소극적(비활성적) 대 적극적(활성적) 등 ‘대안적 관계’에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경제적인 면에서의 상이한 효과가 기대된다. 즉, 〈그림7〉에서 보이는 것처럼, 북유럽과 대륙유럽은 총량적 복지지출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금과 서비스 수준이라는 구성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노정하며, 이에 따라 경제적 성과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림 7〉 현금/서비스 비중 (OECD SOCX)

이러한 현상은 유효수요창출이외에도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의 중요한 차이가 이들 대안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Huber and Stephens, 2001; Esping-Andersen et al., 2002; 안상훈, 2005; 백승호, 2005; 홍경준, 2005). 공공 사회서비스나 활성화를 염두에 둔 적극적 기제들은 인적자본 양성과 고용창출에의 보다 직접적인 효과 등, 다음과 같은 효과들을 추가로 가지기 때문에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더욱 클 것이라 예상된다(Esping-Andersen et al., 2002; 안상훈, 2002).

첫째, 사회서비스나 적극적 기제의 강화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보다 직접적이다(김혜원·안상훈·조영훈, 2005). 사회서비스는 인간에 의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무형의 급여이다. 사회서비스가 늘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가 나타나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서비스 자체가 노동공급 총량을 늘이는데 기여하게 되는 이중적 효과를 지닌다. 노동공급의 증가와 새로이 창출되는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은 한 사회의 생산증가에 직접 기여하게 된다.²⁾

둘째, 사회서비스의 발달과 적극적 기제의 활용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효과를 지닌다(안상훈, 2005). 특히 모든 선진국가의 경제가 지식기반 사회화된 세계화시대에, 사회정책의 인적자본투자가 지니는 성장 기여적 성격은 더욱 강고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

셋째, 공공주도형 사회서비스는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를 창출한다(김홍중·오영범·신정완, 2006). 보육, 양로, 의료 등 사회서비스의 속성상 시장에서의 대규모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시설별로 소규모화 되는 경향이 크다.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는 공공주도형 사회서비스 체인화 전략은 서비스구매의 총비용을 감소시키고 다른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사용되어 궁극적으로 생산에 이바지하게 된다.⁴⁾ 동일한 비용으로 높은 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데, 예컨대 체인

- 2) 보육제도와 같은 사회서비스를 강화하면 아동양육 때문에 집안에 묶여있던 교육받은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를 높이게 되며, 동시에 여성들이 취업할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 낸다. 노인이나 장애인, 실업자 등 노동시장약자집단에 대한 적극적 고용보장서비스는 노동의 숙련화와 재숙련화에 기여함으로써 생애취업기간을 연장시키고, 노동공급의 총량을 증가시키며, 이들 집단에 대한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게 된다. 노동공급의 증가와 새로이 창출되는 사회서비스의 일자리 창출은 한 사회의 생산증가에 직접 기여하게 된다.
- 3) 공보육서비스를 통해 사회내 아동들의 인적자본개발을 초기에 시행하면 장기적으로 그 사회의 생산성을 진작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부를 창출하게 된다. 보건의료에 관한 사회서비스나 고용·교육 보장등과 같은 활성화 기제들도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지니며 마찬가지로 성장친화적 속성을 공유한다.
- 4) 우리나라의 경우 공보육이 매우 저발달된 형국이지만, 사보육보다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보육이 사보육보다 동일한 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공부문 사회서비스만이 지니는 규모의

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피하고 규모의 경제를 담보하는 공공사회서비스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서비스 혹은 적극적 기제의 활용은 예방적 가치재의 선택을 촉진한다(김홍종·오영범·신정완, 2006). 부정적인 비용지출이 예상될 경우 예방적인 성격을 지닌 가치재를 선택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예방적인 가치재의 선택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농후하다. 경제주체들의 단기적 손익계산 경향 때문이다.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관리할 경우만이 예방적 가치재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이 역시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궁극적으로 생산에 기여하는 경로가 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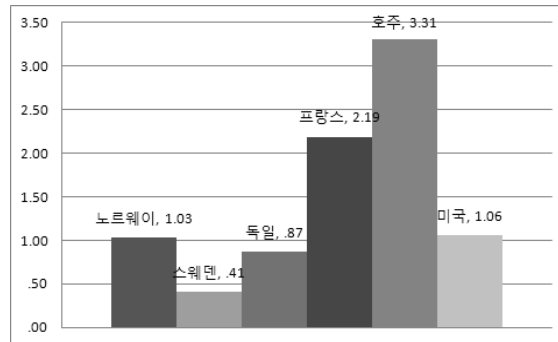
다섯째, 사회서비스와 적극적인 활성화 기제의 활용은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한다(안상훈, 2005). 사회서비스, 특히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은 고용보장서비스는 노동수급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 구조적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이 균형적으로 함께 이루어질 경우, 산업구조조정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정리해고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로 인해 적시에 이루어지는 산업구조조정은 당연히 생산적 성격을 지닌다.⁶⁾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잣대와 관련되면서도 따로 이야기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잣대가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복지를 공정하다고 느끼면서 복지에 필요한 돈을 흔쾌히 낼 것인가의 문제이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사회지출수준이 높으면 국민부담이 당연히 커지고, 국민부담이 커지면 국민들의 복지에 관한 조세저항이 커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간 비교가능한 조세저항지표를 구성해서 살펴보면 예상과는 다른 다음과 같은 관찰이 가능하다(〈그림8〉참조).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국민부담이 큰 북유럽형에 비교해서 가장 부담수준이 낮은 영미형에서 조세저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북유럽 국민들이 앵글로색슨계 국민들보다 착하기 때문일까? 아닐 것이다. 아마도, 복지를 선별주의적으로, 아니 잔여주의적으로 실시할 경우에 발생하는 정치사회적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호주의 예에서와 같이, 확장된 공공부조라고 할 수 있는 소위 ‘70% 복지’를 시행하는 경우 조세저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다. 70%는 싼값으로 혹은 무상으로 복지혜택을 누리는 반면, 30%는 세금만 내면서 공공복지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에 30%의 조세저항이 거세질 공산이 큰 것이다. 오히려 미국과 같이 빈곤층에만 무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잔여주의에서는 복지정치가 1:9로 나뉘더라도, 90%의 국민들이 복지에 필요한 세금부담을 도맡으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약간의 돈’ 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 것과 대비된다.

경제에 관한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체인화 등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규모의 경제 창출에 공공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5) 빈곤층 아동교육에 대한 선제적 투자나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등 예방보건의료에 대한 소비의 진작은 공공부문에서 이러한 가치재를 관리해야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국제비교를 보면 사회서비스지출과 치안지출은 반비례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사회정책 일반, 특히 사회서비스를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양성은 인적자본육성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탈적 인간형의 최소화를 위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초기에 일탈예방비용을 아낄 경우, 추후 치안유지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6) 실제로 북유럽과 같이 적극적 고용보장서비스(active labor market policy)를 필두로 한 사회정책의 안전망을 완비한 나라일수록 노사분규의 강도와 횟수가 작게 나타나며, 다른 나라보다 선제적인 산업구조조정을 이루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림 8〉 조세저항 (ISSP, 각년도)

그렇다면 북유럽과 대륙유럽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거의 모두가 부담을 하면서 모두 다함께 복지를 받는 것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유럽국가들 사이에도 조세저항의 모습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앞서 〈그림7〉에서 본 것처럼, 총지출보다 지출 구성에 주목할 경우 해석을 위한 약간의 실마리가 확보된다. 대륙유럽형은 주로 연금이나 실업보험 등 현금으로 이루어진 급여를 중심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복지급여를 받기까지는 보험료만 내면서 오래도록 기다려야 한다. 이른바 ‘잠재적’인 혹은 ‘유보된’ 수급권인 것이다. 반면, 북유럽형에서는 현금 뿐만 아니라 보육, 교육, 건강, 주거, 고용 등의 분야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서비스는 이용을 위해 돈을 부담해야 하기는 하지만 매우 ‘가시적’이고 ‘일상적’으로 급여를 향유하게 된다는 면에서 대륙유럽의 현금급여와 차이가 난다. 부담과 동시에 혜택이 주어지는 일상적 급여를 위주로 복지국가를 발전시킬 경우 부담수준과 상관없이 조세저항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총평컨대, 복지국가의 조세저항은 총복지지출이나 국민부담률의 크기와 반비례하거나 혹은 상관없는 경향이 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혜자의 폭을 확장할 경우에는 조세저항의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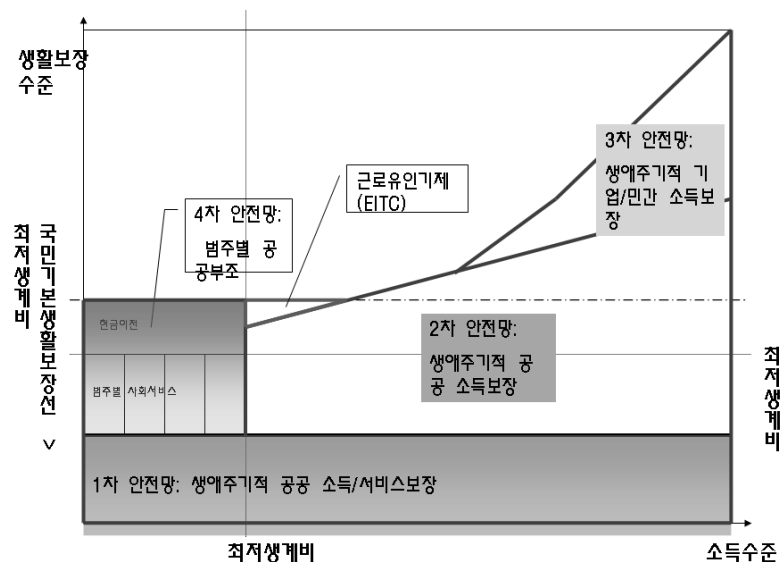
4. 분별주의(discretionary)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생활보장체계로의 개혁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전략을 새로이 가다듬기 위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형식적인 면에서 북유럽형 보편주의가 가장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 복지국가의 배경이 되었던 거의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해답은 될 수 없다(Ahn, 2000). 스웨덴 같은 나라마저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둘째, 공정한 복지의 여러 측면 중에서 어떠한 것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보편주의가 답일 수도 있고 선별주의가 답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이러한 흑백논리를 뛰어 넘어야만 한국형 전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적인 면에서 한국형 복지전략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는 ‘소득보장’

7) 재분배, 즉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표적집단을 빈곤층에게만 잔여적으로 한정하고 복지지출을 집중하면 대상효율(target efficiency)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매우 상식에 부합하며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의 근본원리로 작동한다. 하지만 실제상황에서의 재분배 정도는 큰 정부 상황에서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국민부담수준의 정도 혹은 총사회지출의 정도에 비례하는 경향이 발견되는 것이다. 재분배의 역설이 발생하는 이유는 잔여주의가 납세자의 동의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급여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70% 복지라는 선별주의의 경우에도 부담과 복지가 계층간에 확실하게 구분되는 방식으로 제도화될 경우 조세저항을 높일 공산이 크다고 여겨진다.

에서 ‘생활보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욕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담보하는 수단을 소득보장에서 서비스보장과 소득보장을 아우르는 생활보장으로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소득보장전략은 주로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수단이었으나 최근 정치·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유럽의 개혁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즉, 사회서비스 보장을 강화하는 생활보장전략은 새로운 한국형 복지국가의 수단적 전략으로 백분 활용되어야 한다.



〈그림 9〉 새로운 다층안전망 체제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의 복지개혁 전략은 〈그림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사회서비스 중심의 다층적 생활보장 안전망 구축으로 요약된다. 현재의 분절적인 안전망은 사각지대와 중복지원의 가능성을 상존시키는 모형으로서 시급한 개선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생애주기적 기본적 욕구(global needs)에 대한 ‘일반적 생활보장’과 특수한 욕구(specific needs)에 대한 ‘범주적 생활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다층 안전망으로의 구조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예컨대, 1차 안전망은 생애주기적 기본생활 욕구에 대한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지향하되, 국민적 부담동의과 국가경제적 여력에 부응하는 선에서 초기에는 취약계층이나 중산층까지에 대한 적용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급여 측면에서는 보편주의적인 방식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소득수준별로 ‘차등이용료’ 방식을 사용하여 무상급여가 가져오는 재정적 부담을 피할 필요가 있다. 차등이용료를 도입할 경우, 수익자부담원칙의 견지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고 낙인을 방지하며, 무엇보다 직접적인 국가재정의 절감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차 안전망은 생애주기적 기본생활 욕구에 대한 소득보장으로, 사회보험형 공적 현금급여로 구성한다. 기본욕구에 관한 정책대응을 사회서비스형 1차안전망이 상당부분 소화할 것이므로, 정책적 사각지대를 줄이면서도 재정부담은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 전망한다.

3차 안전망은 생애주기적 기본생활 욕구에 대해서 일정부분 민영화된 소득보장, 예를 들면 퇴직연금과 민간연금보험으로 구성한다. 이는 부담에 대한 공정성과 급여 수준의 적절성이라는 면에서 중산층 이상의 욕구를 수용하고, 시장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문이다.

4차 안전망은 3차 안전망까지의 다층 기제를 통해서도 끝까지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겨질, 취약계층의 잔여욕구에 대한 범주형 공공부조로 구성한다. 이는 대표적인 사회적 취약그룹들, 예를 들자면 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실업자 가구에 대한 특수한 사회서비스에 더하여 보충적으로 제공되는 현금급여로 구성한다. 무엇보다, ‘자격 없는 빈자(undeserving poor)’논쟁에 휘말리기 쉬운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가적 고용서비스와 결합된 ‘실업부조’ 등의 형태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욕구의 종류에 따라 복지의 보편적 적용을 완화하는 다양한 분별적(discretionary) 조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보편주의는 잔여적(residual)인 선별주의의 반대말일수도 있지만, 때로는 보충적(supplementary)⁸⁾ 부가급여의 형태로 완화될 수도 있는 것이다.

보편적인 탑다운 정책은 시민들의 협력적 잠재성을 저해하고 개별 인간의 개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 보편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보충적인 방식으로 완화된 보편주의 혹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맞춤형 조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differential equality)’을 염두에 두고 개성 있는 인간 욕구의 다양성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결국 복지를 공공재라고 한다면, 공공재의 대상이 되는 욕구에 따라 분별 있는 맞춤형 조합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는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재이며, 둘째는 노동시장 참여자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재, 그리고 셋째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재가 그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본욕구와 특수욕구를 잘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소득수준만으로 복지의 대상을 정하는 경제적 욕구평가에서 벗어나 개인과 집단의 욕구차이를 진단하는 전문적 욕구평가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식의 복지를 추구하건 간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공정복지의 기본원칙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복지수준에 걸맞은 방식으로 복지비용을 적절하고 공정하게 분담하는 일이다. 비록 여기서 이 문제를 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이 이러한 부담에 동참하도록,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되도록 부담에 관한 제도를 개혁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부담의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에서 좋은 복지국가의 첫걸음이 시작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결국, 좋은 복지, 공정한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는 우리사회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조화롭게 구성해낼 경우에만 약속되는 합리성의 선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 새 정부 복지정책의 전망과 지자체 전략에의 함의

첫째, 한국형 전략의 핵심으로서 고용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프로그램 차원에서 구체화하는데 지자체도 역할을 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국형’ 복지국가전략의 핵심은 ‘사회서비스 고용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창출’이다. 공약대로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면, 성장률도 올라가고 중산층도 늘 것이다. 유럽병의 근본원인이 무작정식의 현금복지 때문이었다면, 복지를 늘려가되 웬만하면 서비스복지로 늘리자는 게 새로

8) 보충적 접근이란 기본욕구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를 깔아주고 추가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부가급여를 더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즉, 초기에는 매우 기본적인 것만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욕구에 대해서는 소득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급여제공에서 시작해서 사회의 부담능력이 올라감에 따라 소득상층으로 급여대상을 넓혀가는 점진적 보편주의 전략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는 기본욕구에 대한 공동대응 없이 욕구가 긴급한 취약계층에만 제공하는 잔여적 접근의 대가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운 전략의 요체이다. 사회서비스를 늘리게 되면 이 분야의 고용이 자동적으로 늘게 되고, 고용이 늘게 되면 선순환이 시작된다. 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복지지출은 줄게 되지만 세금은 많이 걷히고 성장률은 올라가게 되는 것이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고용률이 특히 낮은 여성부문에서의 일자리 확충을 복지지출과 연결시키는 게 주요과제다. 복지국가가 머느리나 엄마노릇을 대신 맡아서 하게 되면, 저학력여성을 위한 ‘돌봄일자리’가 확대됨과 동시에 고학력여성들이 마음 놓고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사회적 경제부문의 보호된 시장에서의 사회서비스 고용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복지전략은, 한국 자본주의에 젊음을 되찾게 해줄 것이고 새로운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둘째,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차원의 국민행복연금에 더해 노인일자리를 적극 개발하는 데 지자체가 나서야 할 것이다.

만연한 노인빈곤은 소득과 연금가입기간을 고려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도모될 예정이다. 최종안이 나오려면 갈 길이 멀겠지만, 노후의 생활보장도 국민행복연금만으로는 2% 부족하다.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일자리 확대해서 노인들도 능력에 따라 사회기여를 계속하도록 활성화하는 것이 새 정부 복지정책의 또 다른 기조이다. 100세 사회를 바라보는 오늘, 현금성 연금만으로 노인빈곤을 줄인다는 생각은 반쪽짜리 정답일 것이다. 건강수명을 기준으로 연금지급연령을 현실화해가는 방안 마련도 필요한 일이다.

셋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도 중요하지만 생활체육부터 챙기는 예방적 건강서비스 마련은 결국 지자체의 몫일 것이다.

4대 중증질환이나 노인 임플란트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계속될 것이지만, 의료 이전에 국민을 건강하게 할 방안을 찾으려는 예방적 접근도 중요하다. 지역보건소를 ‘지역건강증진센터’로 탈바꿈 시켜서 생활체육과 보건을 연결시키는 융합정책이 필요한 부분이다.

넷째, 복지전달체계의 재구축은 사회서비스 강화형 복지확충전략의 핵심이며, 결국 키는 지자체들이 쥐고 있다고 여겨진다.

거의 모든 중앙부처에서 제각각의 복지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읍면동 말단 행정조직에서는 평균적으로 2~3명 정도가 모든 일을 맡아서 한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자살에까지 이르는 복지공무원들이 나오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복지전달체계의 후진적인 민낯이다.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란 애초에 불가능한 실정이고, 촘촘한 복지를 실시하는 일이란 꿈도 못 꿀 지경이다. 지난 정부들도 찢끔찢끔 복지인력을 늘려서 왔으나, 생색내기식의 인력 충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이다. 제대로 된 복지국가로 국가경영의 패러다임을 바뀌려는 지금, 도장찍기 인력을 대민서비스 인력으로 전환하는 정부조직 전반에 걸친 대대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섯째, 보편과 선별이라는 흑백논리를 넘어서서, 부담수준과 복지수준을 어떻게 맞춰 갈 것인지에 관한 국민적 대타협이 무엇보다 긴요하며 이에 관한 국민인식제고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작년의 선거들과서와 같이 모든 일을 정치인들에게만 맡겨 둔다면 ‘저부담 고복지’의 속삭임만 계속될 것이다. PIGS국가를 답습해서 후세대에 빚잔치를 물려주는 불공정의 복지정치는 국민 대타협으로만 막을 수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고민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들부터 나서서 나라형편에 맞는 복지의 밑그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5년짜리가 아닌 장기적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국민부담과 복지수준의 조정이 필요하며, 다른 나라를 그대로 따라하는 후발자로서의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한국복지모델’에 관해 고민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복지모델이 아무리 멋져보여도 그대로 따라할 상황이 아니라는 현실적인 각성도 필요하다. 복지국가를 시작하는 경제적 상황배경(황금기 대 침체기)이나 엄청나게 빠른 고령화 속도(스웨덴의 5배 이상), 무엇보다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제(단기적 통일비용은 거의 복지비용)를 감안한 짜임새 있는 한국형 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선거경쟁을 넘어선 국민적 대타협의 공론화에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참고문헌

- 김세원 외 (2011). *페어 소사이어티*. 서울 : 한경BP
- 김기덕 (2002). *사회복지윤리학*. 서울 : 나눔의 집
- 김혜원, 안상훈, 조영훈 (2005).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김홍중, 오형범, 신정완 (2006).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발표 보고서.
- 백승호 (2005).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안상훈 (2002). “세 가지 복지자본주의에서의 생산적 복지, 그 성적표 : 복지국가의 경제적 효과와 평등전략의 차이에 관한 체제론적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9호.
- 안상훈 (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연구 :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7(2).
- 안상훈 (2007). *복지국가 재편기 북유럽 탈빈곤 정책의 변화*. *사회복지연구*. vol. 33. pp.313-337.
- 홍경준(2005). “한국 복지체제의 전환을 위한 현실진단과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Ahn, S.-H. (2000). *Pro-Welfare Politics : A Model for Changes in European Welfare States*. Uppsala : Univesitetstryckeriet.
- Barr, N. (2004). *Economics of the Welfare State* (4th edition)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Daniel, C. (1997). ‘Socialists and Equality’ in Jane Franklin (ed.), *Equality*. London :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pp. 11-27
-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Cambridge : Polity Press
- Esping-Andersen, G., D. Gallie, A. Hemerijck, and J. Myles. (2002).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Marshall, T.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ller, D. (1976). *Social Justic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Huber, E. & Stephens, J.D. (2001). *Development and Crisis of the Welfare State : Parties and Policies in Global Markets*.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토론문 ①

토 론 문

김 정 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1. 사회서비스 확대에 대한 2가지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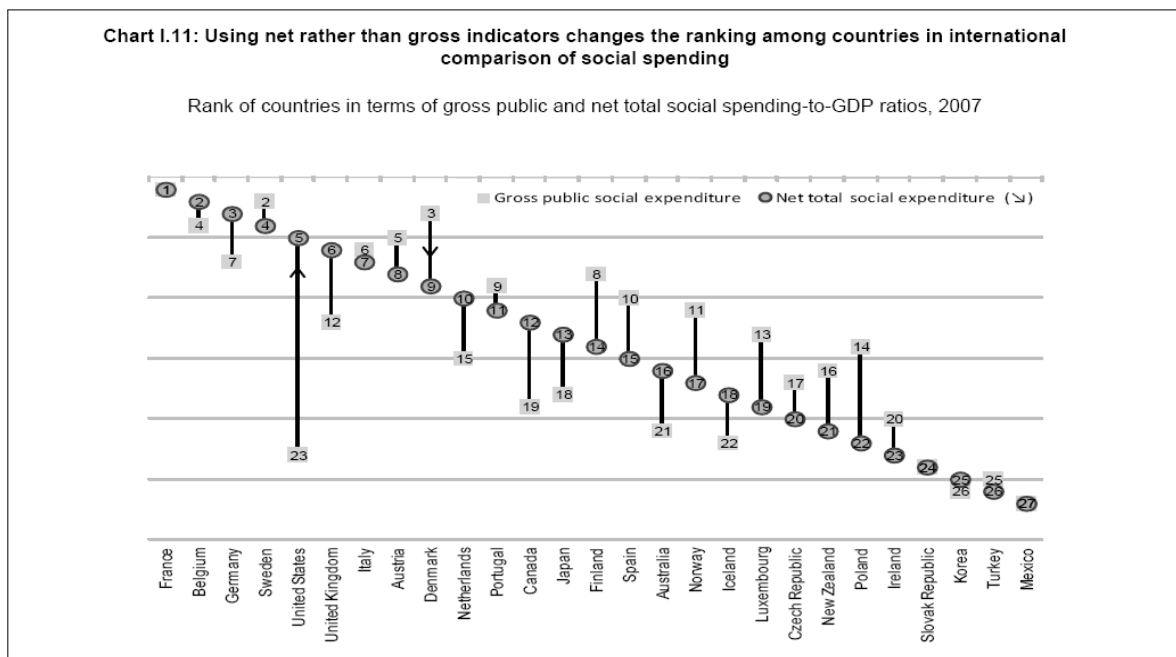
1) 공급 주체(정부 vs 민간), 2) 그리고 서비스의 질 확보

- 공공이 주체가 되어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도모하면 복지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본문에서 사회서비스증가가 복지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이 민간부분의 확대를 통한 서비스확대를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공부문에서의 확대를 의미하시는 것인지?
- 서비스의 질 확보가 없는 단순한 사회서비스 확대는 저임금 근로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
- 사회서비스의 질 확보 : 돌봄서비스의 경우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사회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음. 미국의 경우 TANF를 통해 저소득층 싱글마더들을 노동시장으로 보내고 정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저하로 아동들의 발달장애, 언어장애 현상들이 나타나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논문들도 다수 있는 실정

2. 노인빈곤문제

사실 노인빈곤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건강악화에 따른 의료비 부담증가부분임. 즉 일할 수 없는 노인층의 빈곤문제가 핵심.

- ### 3.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와 더불어 민간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도 모색. 국가의 복지지출이 낮은 나라들의 경우 민간자원의 보충적 성격이 높음. 미국의 예
- 미국은 OECD 27개국 중 정부복지지출이 23위였으나, 세제혜택 및 민간의 자발적 지출을 포함한 순사회복지지출은 5위로 상승 (아래 표 참조)



자료 : Willem A., Pauline F., & Maxime L (2011) Is the European Welfare State Really More Expensive?

4. 복지제도의 정착이나 발전을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의 조정과정으로 보는데, 이는 복지정책의 중요한 주체인 정부부분의 요소들도 언급되어야 가능한 논의
- 즉 정부정책의 책임성(accountability), 투명성 (transparency), 그리고 민주주의의 수준 등이 중요하며 이를 간과하고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로만 보면 복지제도의 성숙 및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책임성, 투명성, 민주주의 수준 등에 의한 정부에 대한 신뢰성 수준이 일반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논하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전제조건일 수도 있음
5. 현재 우리나라에서 복지가 이슈인 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증산층 감소, 소득격차 증가 등이 확대되면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이 저해되기 때문 ⇒ 하지만, 본 발표의 논의가 ‘복지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지속가능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현재의 한국사회현실과는 상이
6. 재정위기 국가들에 대한 논의 : 근본적으로는 복지시스템이 경제위기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위기, 그리고 유럽통합이후 유로화의 유입, 그리고 지하경제의 활성화로 인한 세수확보 부족 등의 문제가 근본적인 이유임.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각주 2).
7. 공짜복지 : 실제로 모든 공공복지제도는 국민들의 세금(직접세, 간접세-부가가치세 등)으로 구성되므로 실제로 공짜복지는 존재하지 않음.
8. 분별주의(discretionary) 방식은 현재의 1-3차 사회안전망과의 개념과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인지?



토론문 ②

토 론 문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I. 개 관

작년에 치른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당들 간에 각종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경쟁적으로 하고 나섰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서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사실 국민들이 복지 확대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지하는 데에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경제적 문제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기에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2003년의 신용대란, 2008년 말 세계 경제위기 등을 거치면서 국민들이 겪었던 생활상의 고통과 미래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즉, 불평등한 소득분배로 인한 사회양극화의 심화,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의 미흡, 경제위기로 인한 체감경기의 하락 등과 같은 요인들이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드디어 치열한 대통령선거전을 거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행복’을 기치로 내걸고 등장한 현 정부가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의 실천을 구체화할 수 있는 로드맵의 제시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일 것이다.

지난 선거전 시기에 ‘복지정치’가 중요한 화두였다면, 지금부터는 ‘복지공학’의 관점에서 보다 정교하게 한국형 복지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복지를 둘러싼 여건의 변화와 함께 세계적 경제위기의 순환적 발생 등과 같은 불확실성의 증대로 인해 지속가능한 복지체계의 구축이 가장 핵심적인 복지국가 발전전략 구상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II. 발표문에 대한 소고

이런 맥락에서 안상훈 교수의 ‘분별주의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생활보장체계의 개혁’에 대체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몇 가지 논쟁이 될 만한 이슈를 간략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공공 사회서비스의 확대와 관련해서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효과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민간 또는 시장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 중 정부부문의 과부하 상태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열악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부문의 확장은 무리수임에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복지재원의 마련을 위한 증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증세에 따른 조세저항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진 복지국가의 조세구조를 보면 조세부담률은 우리나라 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조세부담률의 인상은 아직 여유가 있어 보인다.

호주의 경우 사회보장세가 없어 개인에게 부과하는 소득과세의 비중이 56.1%로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33.1%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거세다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선진 복지국가들 중 복지지출이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는 국가들의 경우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사회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복지와 고용의 증진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과 함께 고용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여성노동력 활용방안, 돌봄노동의 질 향상, 개별급여제 도입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보다 필요할 것이다.

Ⅲ. 몇 가지 논의들

1. 복지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

복지환경의 변화 중 주목해야 할 위협요소들 중의 하나가 급격한 저출산, 고령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동시장의 인구구조 변화이다. 즉, 고령화 및 저출산 추세로 인해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 잠재력을 하락시키고 사회보장 부담을 증가시켜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게 된다. 또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와 광범위한 청년실업 문제는 세대간, 계층간 갈등의 위험성도 증대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이다.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2000년-58.5%, 2005년 - 59.8%, 2010년 58.7%). 특히 경제위기의 가장 직접적 타격을 받고 있는 청년층의 경우 고용이 심각한 상황이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불안정한 고용문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은 성장잠재력 저하 및 소득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의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고용률의 제고이다.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1995~2006)은 0.214으로서 EU 15개국 평균 0.599, 미국 0.629, 독일 0.833, 일본 0.310 등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서는 고용창출효과가 낮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성장, 기업의 해외이전, 글로벌 아웃소싱, 노동절약형 기술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해 고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시장의 구조 개혁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의 취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시장친화적 성장 전략과 단기간 위주의 직접적 일자리창출정책에 치중해 온 국가정책의 수정을 의미한다.

2. 복지와 고용의 우선순위

‘함께 가는 복지와 고용’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지만, 이들의 관계를 병렬적으로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우선순위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정리가 필요하다.

복지-고용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에서와 같이 복지와 고용 양 부문에서의 정책수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를 따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상황과 지속가능한 사회구조의 형성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복지 확대보다 고용 증대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근로소득 획득 기회를 갖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이후 복지 급여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제공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단, 이러한 정책방향은 복지대상의 보편화와 사회적 위험의

포괄적 보호, 급여수준의 충분성을 목표로 한 복지체계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전제로 한다.

3.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현행 우리나라 복지모형은 ‘저부담 저복지’ 모형이다. 만약 복지지출의 확대를 통한 ‘고부담 고복지’ 모형을 추구한다면, 누가 어떻게 복지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복지재정의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는 복지지출 능력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국민들의 복지증진 기대가 매우 높다는 사실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OECD국가들 간의 복지비지출 수준, 국가 재정건전성, 인구고령화율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복지부문의 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 국가의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복지국가가 산타클로스국가가 아닌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복지확대에 따른 부담과 관련된 국민들의 의식을 보면 NIMP(Not In My Pocket) 현상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치권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들 중의 하나가 바로 국민들의 복지확대 기대와 이에 따른 부담의사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국민적 합의의 도출이다.

4. 맞춤형 고용복지 :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의 개발

신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맞춤형 고용-복지’이다. 이는 최근 선진 복지국가들이 추구하는 정책방향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맞춤형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근로유인형 복지정책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는 근로빈곤층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로서는 첫째, 정책대상인 근로빈곤층과 최저빈곤층의 사회적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근로빈곤층의 경우 가족 지지망이나 사회적 자본이 취약한 집단으로 보건, 복지, 주거, 교육, 부채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소득보장정책만으로는 이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특히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최저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함께 종합적인 복지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탈빈곤정책체계를 보다 다양하고 정합성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 현재 탈빈곤정책의 구조는 의외로 단순한데, 이는 최저빈곤층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정도만이 대표적인 제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빈곤층에 대한 보건·의료보장성 강화, 미래위험 예방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 주거지원, 교육훈련기회 확대 등과 같은 복지급여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저출산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애주기별 접근을 강화해야 하며, 복지체계 내의 주요 급여를 욕구별로 구분하는 개별급여체계를 도입과 같은 급여체계의 개선을 통해 복지대상을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지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구조 개선이다. 탈빈곤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대상자의 자활 또는 자립인데, 현실적으로 가시적인 정책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들 중의 하나가 바로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유인과 제재의 활용, 수급기간이나 급여종류 및 수준의 탄력적 적용 등을 통해 적극적인 탈빈곤 노력을 유인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책수단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전달체계의 개편이다. 최근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 사례관리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복지-고용 연계프로그램의 운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근로빈곤층과 저소득가구의 경우 복합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개별 가구 및 개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편,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고용부와 복지부 소관 일선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통합과 전문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이나 근로희망계층의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인프라의 구축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기반의 확충과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복지문화 성숙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하루빨리 도래하기를 기대해본다.

토론문 ③

토 론 문

이 창 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1. 총평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체제는 복지담론에서 핵심 이슈다. 보통 우리가 새로운 사회, 이른바 대안사회를 고민할 때 크게 세 가지 관점, 또는 포인트를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 첫째가 바람직함이다. 대안사회는 존엄과 정의와 연대 등의 가치를 부합하고 있는가? 인간의 기본권 특히 사회권을 충분히 보장 하는가 등이다. 가치론적 판단과 접근이다. 둘째는 실현가능성이다. 어떤 체제든 실현가능해야 한다. 텅빈의 몽상이나 백일몽으로 새 세상을 논할 수가 없다. 몽상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잠정적 유토피아 또는 리얼 유토피아여야 한다. 셋째는 지속가능성이다. 특정 시기나 한 때만이 유효한 모델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속가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깊은 부작용과 더 큰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 적어도 수 십년 이상은 지속돼야 대안체제로서 유용하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바람직한 모델만 고집하면 현실성 없는 몽상이나 이념적 도그마에 빠질 수 있으며, 실현가능성만을 염두 한다면 소극적이며 정작 수단과 목표를 전도하기 쉬우며 또한 지속가능성만을 고려하다간 지나친 장기플랜에 빠져 당장의 임기대응력을 잃거나 역시 과감하고 결단성 있는 계획을 세우거나 적극적인 전략적 실천에 임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렇기에 좀 더 나은 사회를 모색하는 이라면 필히 이 세 가지 관점의 균형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안상훈 교수의 발제문은 이 가운데 우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 고심해야 할 대목이 지속가능성에 입각해 한국형 복지전략을 살핀 글이다. 실용적인 복지전략이란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단지 재원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경제적, 재정적,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두루 살펴야 할 것 이라고 본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물론 재정일 것이다. 재원 없이는 그 어떤 구상과 화려한 계획도 다 탁상공론일 뿐일 테니까.

여하간 안 교수의 한국형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전략은 매우 흥미롭고 논쟁적인 글이다. 그의 글은 기존의 진보와 보수의 고답적인 복지담론의 틀을 벗어나 있다. 그 나름의 숙성되고 일관된 지점을 갖고 있다. 스웨덴에서 학위를 한 만큼, 그가 강조해온 복지국가는 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이다. 물론 그는 이를 말하면서 스웨덴 모델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며 한국적 모델을 강조한다.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함께하는 복지전략, 이른바 한국형 복지전략은 그러해야 한다는 게 그의 논지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리고 지속가능한 한국적 모델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타당한가?

2. 이슈와 쟁점

안 교수의 발표문은 몇 가지 논쟁적 질문을 던진다. 그는 현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과 방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도 끼치고 있다. 일찍이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의 기초를 닦는 데도 참여했고, 인수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다. 현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이다. 그렇다면 그의 논지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내용 및 방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니 여기선 자세히 생략한다. 다만 몇 가지 개념과 논리를 중심으로 논해본다.

1) 공정복지

안 교수가 강조하는 개념 중 하나가 공정복지다. 공정복지란 공정한 사회의 복지이며, 이는 안교수의 복지이념의 중대한 이념적 논거이자 토대다. 공정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제시했지만, 실제 현실과 간극이 커 다소 그 말이 오염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윤리적으로 중요하고 관철되어야 할 개념이다. 이는 진보와 보수 특정 정치 진영에서 독점할 수 없는 가치다. 서두에 그가 던진 질문은 이런 선상에서 앞자리에 의도적으로 제기됐는데 예컨대 ‘복지가 무상으로 될 수 있나?’ 복지가 권리인가?, ‘의무없이 권리없다’는 표현 등이 그러하다. 그는 공정한 사회의 복지, 이른바 공정복지의 특징으로 세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가 기회의 평등이 담보돼 결과적으로 약자에게 더 분배가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한 사회의 총복지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원에 입각한 창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국가가 정의로운 자세를 기반으로 재분배를 시행해야 하며 권리와 의무에 입각해 정치적으로 수용되는 재원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강조하는 공정복지의 내용을 두고 전면 부정하는 이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다분히 정언적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적 지점이 없지 않다. 우선 기회의 평등은 중요하다. 하지만 한 사회의 정의 그가 그토록 강조한 공정성은 기회의 평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으로 그는 결과적으로 약자에게 분배가 더 담보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결과의 평등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기회의 평등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평등을 낳을 수 없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똑같이 100미터 선상에서 달리기 경기를 시킨다고 할 때 기회의 평등은 이룰지라도 이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게임을 하도록 한 게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적절하고 합리적인 핸디캡을 주어야 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는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나 명확한 것은 기회의 평등은 때로는 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을 수 있으며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이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논점은 권리와 의무의 개념이다. 안 교수는 스웨덴 옘살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논문은 책으로 출간됐는데 필자도 애독한 바다. ‘복지동맹’ 워낙 오래전에 본 것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무튼 기억해보건대 Welfare alliance라고 알고 있다. 그 책에서는 그는 복지정치의 새로운 균열축을 제시했다. 이른바 복지지위의 개념이다. 그는 복지지위란 축을 제시하는 데서 기존의 권리중심의 사민주의 이론과는 다른 권리만큼 의무도 중요하다는 의무를 상당 강조했다. 이런 그의 생각은 안 교수의 복지관의 중요한 원천지로 기능하는 듯하다. 지나친 권리중심에 입각한 복지관은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해치고 복지병을 낳을 수 있다. 복지는 누군가의 부담, 의무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논지다. 재원 없이 복지 실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교수에게서 권리와 의무는 공정복지의 양대 기둥이다. 무상복지, 공짜복지 담론을 그가 경계하는 데는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다. 합리적인 논리다. 매우 균형적 시각으로 보이나 문제는 아니, 우리가 상기해야 할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사회권, 복지권을 강조한 바에는 의무에 비해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그래온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선진

복지국가, 흔히 말하는 복지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강조되어야 할 의무와 권리의 균형 논리에 비해 우리 사회에선 좀 더 권리가 강조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라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차가운 개념적 균형성보다, 현장과 실제의 상황을 고려한 따뜻한 균형성 추구가 더 사회정의에 부합할 때가 많다. 필자는 열악한 우리 복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권, 사회권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쪽이다. 아마 안 교수도 모르지 않다고 본다. 다만 노파심에 첨언하건대 권리를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무 없이 권리만을 내세우거나 마치 공짜복지를 용인한다는 것은 아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부연하건대, 보편적 복지 담론도 공짜복지 담론일 수가 없다. 무상복지 또한 공짜복지일 수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진 측면이 없는 바는 아니나, 등치시킬 순 없다. 아마 이 점은 안교수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무상급식 이슈가 등장한 이래 무상의료와 무상보육 등을 합쳐 이른바 무상복지론이 등장하면서 복지논쟁을 낳았다. 여기서 무상이란 표현을 두고 공짜복지 운운하는 경우가 많다. 일부 언론은 ‘무상복지=공짜복지’를 말한다면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의 담론에 맹공을 가했다. 무상복지론은 몇 몇 힘센 언론에 의해 사실상 공짜복지로 채색됐다. 한국 사회의 담론 지형에서 언론의 역할과 힘은 실로 막대하다.

그러나 사실 어느 누가 부담없이 공짜복지가 보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나? 다만 여기서 무상은 복지 수혜의 시점에서 무상이란 얘기다. 따지고 보면 내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 모두는 각종 서비스를 받고 있고 복지서비스도 그런 가운데 하나다. 이 세상 어디에도 공짜복지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사회는 없다. 그것이야말로 몽상의 세계 일 뿐이다. 안 교수 말대로, 우리 사회는 고부담 고복지, 중부담 중복지, 저부담, 저복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하며, 저부담, 저복지나 저부담 중복지, 저부담 고복지 등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2)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조건으로 사회서비스 전략

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는 안 교수가 오래전부터 주창해온 바 있다. 기본적인 방향엔 필자를 비롯한 많은 사회정책학자 등이 동의하는 바다.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안교수의 발제문에 잘 나타나 있다. 일자리 창출효과에 직접적이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효과를 낳으며 공공주도형 사회서비스는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며 예방적 가치재의 선택을 촉진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더욱이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복지정치 측면에서도 훨씬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안 교수는 소위 보수언론 등에서 말하는 70% 복지론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오히려 보편적 사회서비스 복지국가 모델에 가깝다. 복지의 부담이 높다고 해서 조세저항이 반드시 커지 않는다는 면도 잘 지적해줬다. 그러나 서구의 사회서비스형 복지국가에서 사회서비스의 강조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긴 하나, 한국적 상황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가 있다. 바로 소득보장이다. 소득보장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을뿐더러 이 기본이 함께 이뤄지는 가운데 사회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시각이 필요하다. 많은 학자들은 한국은 소득보장이 너무 낮아서 문제라고 지적한다. 물론 서비스도 낮다.

그러하니 소득보장이 전제되지 않는 서비스의 확대란 어불성설이란 게 사회정책학자들의 상당수의 논지이고 필자도 마찬가지다. 일부 학자들은 안 교수의 주장 내용은 참여정부에서 주창했던 사회투자론의

시각과 매우 맞닿아 있다고 본다. 하여간 어떻게 해석하든 우리는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전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른바 박근혜 복지는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와는 분명 다른 지점에서 서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레토릭과 실재다. 박근혜 복지는 레토릭과 실재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3)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의 화두로 본 북유럽 복지모델, 우리의 해답인가?

- 북구 복지국가 탐방을 다녀와서
- 2013 스톡홀름사회포럼 개최 : 스웨덴과 덴마크 42명의 방문(7박9일), 주제는 지역복지와 사회적 대타협
- 시사점 : 북구에서도 지속가능성이 화두. 그런 면에서 어떻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꾀할 것인가가 여전히 당면 과제.

■ 스웨덴(북유럽) 모델의 몇 가지 특징(Erixson, Choe, 2013)

- 세금에 기반한 복지서비스 제공과 이전소득
- 소득비례 사회보험제공(덴마크 제외)
- 실업률 감소를 위한 확장된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보편적 혹은선별적인) 경제정책들
- 높은 노동참여율
- 소득과 임금평준화(GDP에서 wage share(=labor share)차지하는 비율의 평준화)
-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 정치의 활성화(청소년부터 조기입문, 충원, 교육, 정치전문가 육성)
- 노사존중 및 대화와 타협, 국가 발전의 원동력
- 국민의 집

■ 오늘의 스웨덴 덴마크 등 북구의 경제성적표

real GDP Growth in OECD countries

- 스웨덴 : 90년대 초에서 95-07년대 비약적인 경제회복세를 이뤄냄. 이 부분은 핀란드가 스웨덴보다 낫지만, 스웨덴은 차후 현재까지 꾸준히 플러스성장을 이뤄낸 수치를 통해서 스웨덴모델의 성공을 볼 수 있음.(Erixson, 2013)
-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구 복지국가들 95-2007년 사이에 괄찬은 경제성장 이루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타격을 입으나 역시 빠른 회복세. 특히 노르웨이는 북구 유전 등에 힘입어 돈이 넘쳐나서 처리 놓고 고민 중일 정도로 괄찬고, 유로존에 속하지 않는 스웨덴을 제외한 나머지 3국(흔히 북구 5국에 아이슬란드까지 포함하나, 여기서 제외)은 그런대로 회복세.

	1991-94	95-07	08-11	2012
Sweden	-0,1	3,0	1,1	1,2
Denmark	1,8	2,2	-1,0	-0,5
Norway	3,7	3,0	1,0	3,2
Finland	-1,7	3,9	-0,5	-0,2
Belgium	1,4	2,3	0,6	-0,3
Netherl	2,3	2,9	0,2	-1,0
Austria	2,2	2,6	0,6	0,8
Switzerl	-0,9	1,9	1,3	1,0
SOWEC	1,1	2,7	0,2	0,5
Ireland	3,4	7,3	-1,8	0,9
UK	1,5	3,2	-0,6	0,3
GER	2,1	1,7	0,7	0,9
Euro	1,9	2,3	-0,2	-0,5
US	2,5	3,1	0,2	2,2
OECD	2,0	2,8	0,4	1,4

■ 스웨덴 등 북구 모델의 도전(어려움) Erison, Choe+ 현지 취재를 통해 재정리)

1. 높은 실업률(특히 청년실업 문제 심각 : 방문지인 스웨덴과 덴마크 마찬가지로 청년실업으로 큰 고민, 물론 청년실업이 50%를 넘는 그리스와 스페인, 30%가 넘는 이태리 포르투갈에 남부유럽형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하나, 스웨덴은 20%를 상회하고 덴마크도 15%에 육박, 기준은 25살 미만에 2012년도 기준, 자료는 덴마크 경총)

⇒ 완전고용을 통한 낮은 실업률, 높은 인플레이션 국가 → 높은 실업률, 낮은 인플레이션 국가로 이동
 ⇒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물가안정성을 다른 OECD국가들 중 가장 먼저 최우선과제로 정함

* 시사점 : 청년실업 등 실업문제, 더불어 물가안정과 실업 등 노동 및 복지 등 사회안전망 확충 사이의 거시경제 사회정책적 고민

2. 저 경제성장에 따른 국가재정지출의 부담 문제

- 상대적으로 미국 발에 이은 유로존 경제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기조(스웨덴, 노르웨이) 및 타격이 적은 상태(타 북구 등, 아이슬란드 제외)이나 그럼에도 과거 황금기와 다른 저성장 기조. 그 속에서 재정지출의 부담 문제는 여전히 화두. 스웨덴 노총 관계자는 노조 쪽에서도 어떻게 성장을 높일 것인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답변.
- 복지는 물론 성장에 대한 고민에도 노사가 따로 없음. 공동체 및 상생 문화가 기저에 깔려있음.
- 경제전문가의 역할증대-90년대 이래로 경제전문가들이 경제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
- 새 경제학적 이론 도입
- 합리적 기대 이론과 수정자본주의 도입
- 각종 이론들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높은 보상금 지급이 노동참여율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 부각되는 측면

3. 변화하는 노사관계 속 노조의 힘 약화

- 80년대 중반 이래로 임금협상 협의 대신에 Industrial agreement가 체결되기시작함 (산별 협상). 여전히 노총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임금협상은 진행되어지나, 스웨덴모델을 낳은 중앙교섭력은 이미 급격히 약화하고, 중앙은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하고 산별에서 개별조합으로 하향화. 사실상 임금은 개별단위에서 이뤄지는 양상. 이 과정에서 임금격차와 불평등 확대, 물론 그 차이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아직도 양호하나 점차 늘어난다는 데에서 노총들의 심각한 고민의 영역.

- 노조조직률 하락세

1993	2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2010	2011
85	81	81	81	80	79	78	77	73	71	71	71	70 %

4. 북구모델의 기반인 사민당 기반 약화와 중도우파 집권 계속

- 연이은 사민당 정권의 총선 패배로 노총의 영향력 약화
- 시장화 및 복지혼합형 민영화 정책으로 기존 북구모델의 변화
- 세금 기반 복지프로그램 제공을 민영화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복지서비스수혜대상이 좁혀질 우려.
- 사기업의 실업수당 규제가 약화됨
- 경제정책 수립에 있어 노총과 사민당의 영향력감소

I 전반적인 결과

1. 코로나 평가 절하와 높은 실업률

2. 세금과 이전소득, 자본소득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의 임금격차상승 2004년-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상승세
2004년에서 2010년 사이 집계된 OECD 국가 내 지니계수에서 스웨덴이 가처분소득평준화세계 1위에서 10위로하락.

3. 사회보험 서비스악화

소득비례 실업보험제도의 상한선이 높아짐

2007년 이래로 서비스 수혜시, 개인부담금이 높아짐 + 병가수당과 실업수당의 세분화→수혜자 폭이 좁아짐

- 예컨대, 2012년 실업수당 신청자에 한해서, 실업이전소득의 80%를 실질적으로 지급 받은사람이 전체신청자의 7%밖에 되지 않음 (규정상이전소득의 80% 지급이 필수)
2011년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수혜자가 전체실업자에서 37%밖에되지않음 (엄격화된 수혜규정 때문)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수혜 받는 실업급여에서 개인이 지불한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17% → 76%로 증가. (2011년 50%) -앞서 언급한 Ghent system에 의해 실업수당은 개인이낸 적립금+국가지원금. 여기서 개인적립금 비율 상승- 실업급여제도를 이용하는 사람 급감.

4.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

안교수가 말하는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의 몇 가지 교훈은 다음과 같다.

- 1) 북유럽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없다 2) 보편과 선별의 흑백논리를 뛰어넘자 3) 한국형 복지국가를 정책패키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서 핵심은 생활보장으로서 정책패러다임이다. 종합하면 사회서비스형 생활보장 안전망 구축이다.

큰 틀에서 보면 안 교수의 복지국가 전략의 교훈은 중요하며 동의 못할 이유가 없다. 마지막 결론부분에서 강조한 지자체의 역할 강조, 여성일자리 확충, 노인빈곤문제 해소, 전달체계 재구축 등 하나하나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에서 중요한 과제들이다. 부담과 복지수준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대타협도 마찬가지다.

안 교수가 언급한대로 우리 사회는 보다 구체적인 한국형 복지모델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고 융숭깊게 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런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이다. 안 교수의 논지에서 빠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누가, 주체다.

어떤 정부, 어떤 세력, 어떤 동력으로
어떤 정책선회의 패키지를 통해
우리는
어떤 복지국가를 달성할 것인가?

토론문 ④

토 론 문

유 종 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창조경제: 성장체제인가, 산업정책인가

2013. 7. 5.
KDI국제정책대학원/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유종일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DI SCHOOL

1.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전략

1)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과 비전

<특징>

- 경제성장이 아닌 국민행복을 최고 가치로 규정
-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제고를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
- 경제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를 통한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구조 개선 추구
- 창조경제 구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도모

<긍정적 평가>

-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지배해온 성장지상주의와 90년대 이래 맹위를 떨친 경제사조인 시장만능주의를 극복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비전과 방향설정
 - 1.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시대적 요구 적극 수용
 - 2. 성장률 x% 혹은 국민소득 y달러 식의 양적 성장 목표 지양하고 고용률 70% 목표설정
 - 3. 지하경제 양성화(투명성 제고) 및 과감한 토건예산 감축 등 필요한 조치 추진
- # 박근혜가 아니까 무조건 못 믿는다, 엉터리다, 하고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

<문제점>

- 비전, 전략, 정책수단에 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제시 부족하고, 정책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못함
- 1. 특히 성장전략으로서의 창조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게 인식되지 않음
- '줄푸세'를 비롯하여 구태의연한 경제관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하여 박근혜 정부의 경제철학과 비전을 스스로 혼란에 빠트리는 모습 연출
- 1. 경제민주화에 관한 대통령의 오락가락 발언, 경제민주화와 거리가 먼 정부 인사, 여당 지도부의 소극적 입장 등으로 정부의 경제민주화 의지와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성 저하
- 2.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전략에 매달림으로써 복지정책의 축소왜곡 혹은 무리한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
- 3. 공기기업영화,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부양 등 시장만능주의와 성장지상주의가 판치던 시대의 구태의연한 경제정책을 여전히 추진

2)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좁은 의미의 창조경제>

- 창의성이 특히 중요한 창조산업과 창의적 인재의 활동에 기반한 경제
- 1. 문화산업+@로서의 창조산업: 1998년 영국 블레어 정부의 "창조산업 태스크포스(Creative Industry Task Force)"는 창조산업을 창조적인 노력을 핵심 요소로 삼아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보고 기존의 문화 산업에 건축, 광고 등을 포함하였으며, UNCTAD의 창조경제리포트(Creative Economy Report, 2008년부터 시리즈 발간)에서는 문화유산, 예술, 미디어, 기능 창작물 등을 창조산업으로 분류
- 2. 창조적 경제주체: 리처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는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자, 프로그래머, 예술가 등 핵심창조계급과 의료, 금융, 법률 등 지식기반 서비스 종사자들로 구성되는 전문창조계급이 많을수록 도시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하고, 창조도시의 요건으로 인재(Talent), 기술(Technology), 관용(Tolerance) 등 3T를 꼽음(*The Rise of the Creative Class. 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and Everyday Life*, 2002. Basic Books;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2005. Routledge)

<넓은 의미의 창조경제>

-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는 경제
- 1. 선진국 기술을 배우고 모방하면서 따라잡기(catching-up) 성장을 주로 하는 추격형 경제를 모방경제,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창조하여 생산성 증가를 이끌어내는 선도형 경제를 창조경제로 부름
- 2. 이런 광의의 창조경제 개념은 사실상 요소투입증대가 아닌 혁신에 의한 생산성 증가로 경제성장을 이루는 "혁신주도 성장체제"와 실질적 차이가 없음
- 3. 일례로 존 호킨스(John Howkins)는 "창조경제는 새로운 아이디어, 즉 창의력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및 유통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The Creative Economy: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2001, Penguin)

3)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청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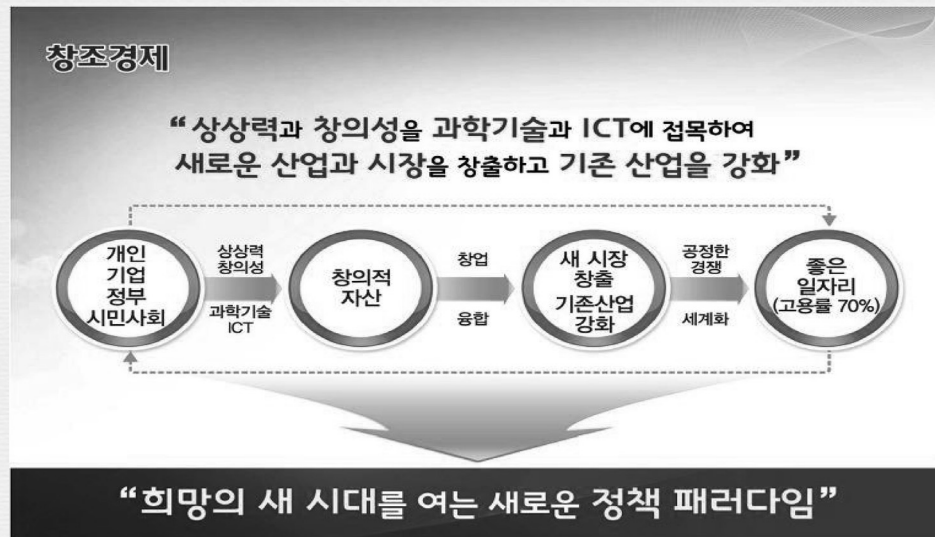
<창조경제 개념의 혼란>

-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백일 동안 '창조경제'를 '경제민주화'보다 열 배 많이 언급 (한겨레신문 6월 4일, '창조경제' 관련 10번 말할 때 '경제민주화' 1번 말했다)
-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취임사)
- 1. 창조경제 개념 혼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가 혼용되고, 또 좁은 의미 가운데서도 과학기술을 강조하는 관점, 정보통신산업과 융합을 강조하는 관점, 창업과 벤처를 강조하는 관점, 문화산업을 강조하는 관점 등이 혼재하여 개념 혼란 초래
- 2.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관계: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취임사)는 인식도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 경제민주화는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인식이 온존하는 가운데 대기업에 창조경제 위한 투자를 의존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사이에 긴장관계 존재

<정부의 창조경제 개념 정립>

- 정부는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창조경제 실현계획-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
- 1. 창조경제 전략 수립의 배경: 경제운영의 패러다임을 그간의 모방·응용을 통한 추격형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한 선도형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한국의 강점인 과학기술·ICT 역량 등을 활용한 한국형 창조경제 추진전략을 수립
- 2. 창조경제의 개념: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과학기술과 ICT에 접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산업을 강화함으로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전략
- 3. 창조경제 생태계: (1) 다양한 개인, 기업들의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교류 소통하면서 과학기술 ICT와 융합되어,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창의적 자산(기술과 지식)을 창출 (2) 창의적 자산이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창업으로 연결되거나 기존 제품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만들어내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3)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 협력하며 세계로 진출하고, 다양하고 많은 좋은 일자리가 끊임 없이 생성

<그림 1>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경제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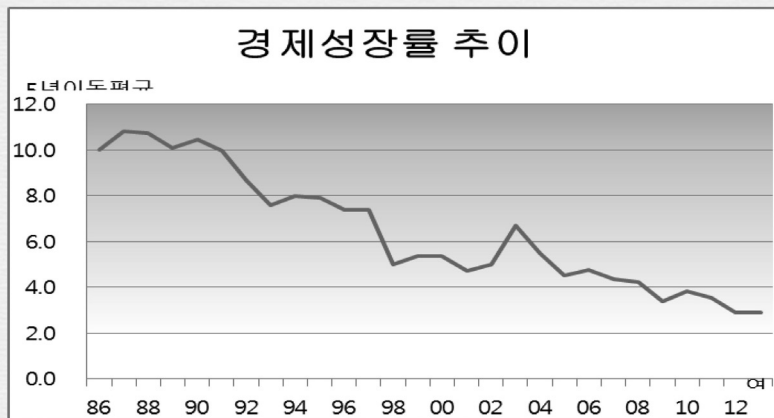
<창조경제 실현계획>

- 정부는 창조경제의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부처별 추진과제를 종합하여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 제시
1. 3대 목표: (1) 창조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 (2) 세계와 함께 하는 창조경제 글로벌 리더십 강화 (3) 창의성이 존중되고, 마음껏 발현되는 사회 구현
 2. 6대 전략: (1)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2) 벤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3)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4)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5)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6)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3. 애초에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6대 추진전략의 하나로 포함 되어 있었으나 확정발표 단계에서 누락

2.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

1) 한국경제의 저성장 문제

<그림 2> 한국경제, '저성장의 늪'에 빠지나?



<'저성장의 늪', 왜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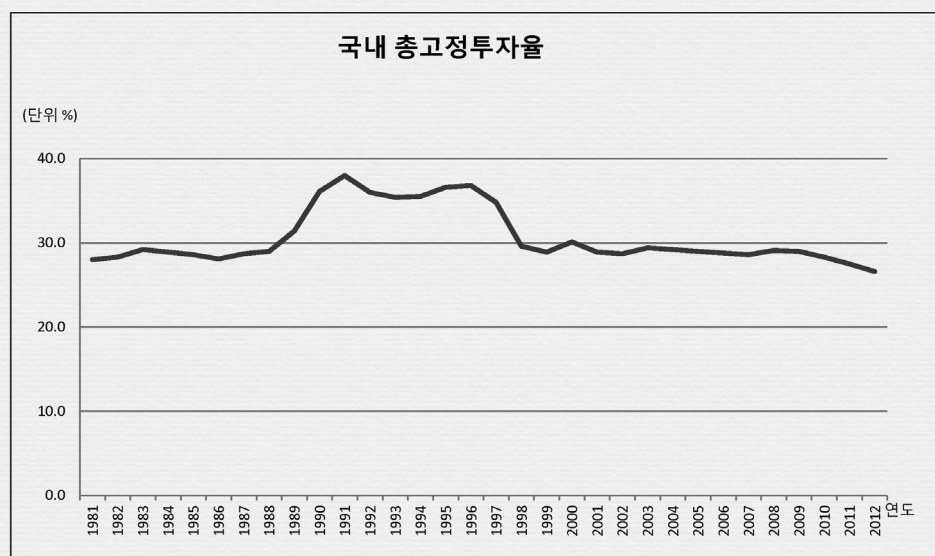
- 성장지상주의 극복은 성장 경시가 아님: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 질문하며, 우선순위를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에 두는 것이며, 이를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
- 저성장이 지속되면 일자리 목표나 복지국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짐
 1. 이러한 상황은 성장에 대한 정치적 요구를 강화시키고, 이는 경제민주화 등 구조개혁 어젠다의 후퇴로 이어질 것임
 2. 구조개혁과 결합된 올바른 성장전략이 필요하며, 개혁정책과 성장전략이 따로 놓면 개혁정책이 밀리게 됨('창조경제'가 과연 답일까?)

2) 저성장의 원인: 공급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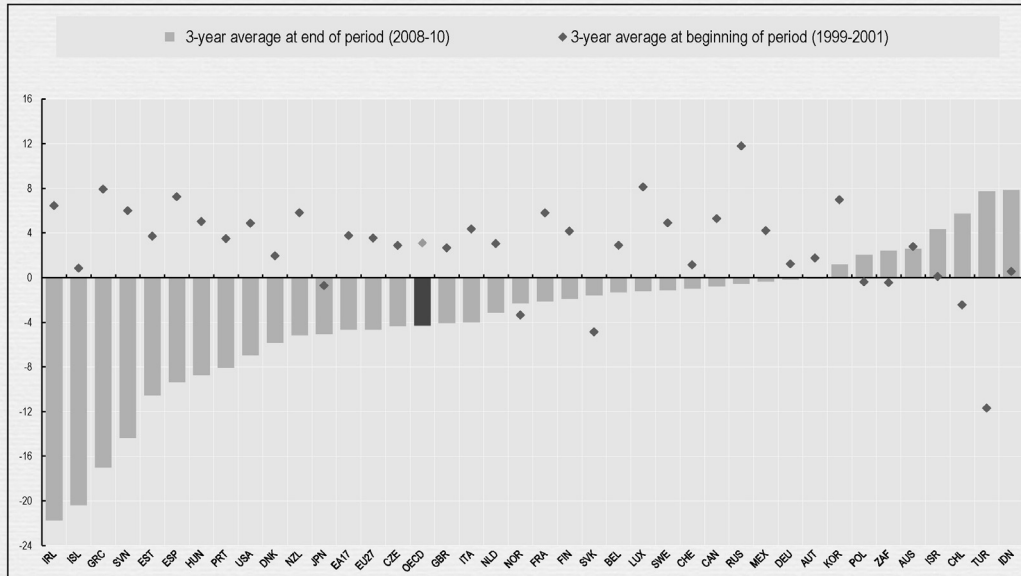
<투자부진이 문제인가?>

- 공급면에서 저성장의 원인을 흔히 투자율의 저하에서 찾고, 따라서 성장을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감세, 규제완화, 투명한 정책환경 ('줄푸세') 등의 친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
- 1. 그러나 GDP 대비 30%대 후반에 이르렀던 90년대초부터 외환위기까지의 투자율은 역사적 트렌드를 벗어난 과잉투자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투자율 하락은 과잉투자 해소의 과정이었음
- 2. 외환위기 이후에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인 30%에 근접하는 투자율이 유지되고 있어서 결코 투자부진이 저성장의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음 (고정자본투자증가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함)

<그림 3> GDP 대비 총고정투자: 1980~2012



<그림 4> OECD 국가 연평균총고정투자증가율: 1999-2010



<혁신부진이 근본문제>

- 성장회계분석에 의하면 노동투입,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TFP)의 기여가 모두 하락하고 있음
1. 따라서 딱히 자본투입만 문제 삼을 근거 없으며, 특히 자본투입의 성장효과는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 경제가 발전할수록 점점 감소하는 것이 당연함
 2. 경제발전이론에 의하면 발전초기에는 노동과 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에 주로 의존하는 요소투입형 성장이 일어나고, 선진국형 발전에서는 요소투입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대신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가에 주로 의존하는 혁신주도형 성장이 일어남
 3. 한국에서는 TFP의 기여가 감소하는 것이 진짜 문제임 (투자 감소가 문제라고 해도 이는 혁신부진에 따라 돈 되는 사업이 많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음)

<그림 5>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80~2010

항목	1980~1990년	1990~2000년	2000~2010년
한국생산성본부(2011)^{a)}			
실질 GDP	9.4	6.1	3.5
노동투입	2.2	1.5	1.1
자본투입	6.6	4.2	2.3
TFP	0.6	0.5	0.2
한국은행(조태영, 김정훈, Schreyer / 2012)			
실질 GDP	10.1	4.9	3.7
노동투입	3.1	1.7	0.9
자본투입 ^{b)}	2.2	2.3	1.5
TFP	4.0	2.4	1.7
가격효과	0.8	-1.5	-0.4
KDI(김동석, 김민수, 김영준, 김승주 / 2012)			
실질 GDP	9.3	5.8	4.6
노동투입	3.4	1.8	1.0
자본투입	1.7	1.1	0.8
TFP	4.2	2.8	2.9

* 분석 대상 기간의 마지막 구간은 2000~09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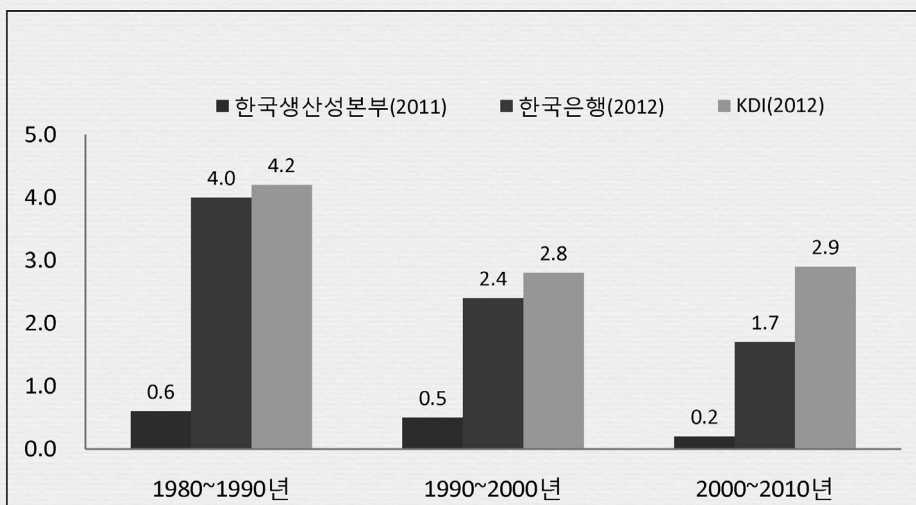
* 재고자산 및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중요소생산성 국제비교”, 한국생산성본부, 2011.

조태영, 김정훈, P. Schreyer, “1980~2010년 중 우리나라 실질소득의 증가요인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 480호, 한국은행, 2012

김동석, 김민수, 김영준, 김승주,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70~2010”, KDI연구보고서 2012-8, KDI,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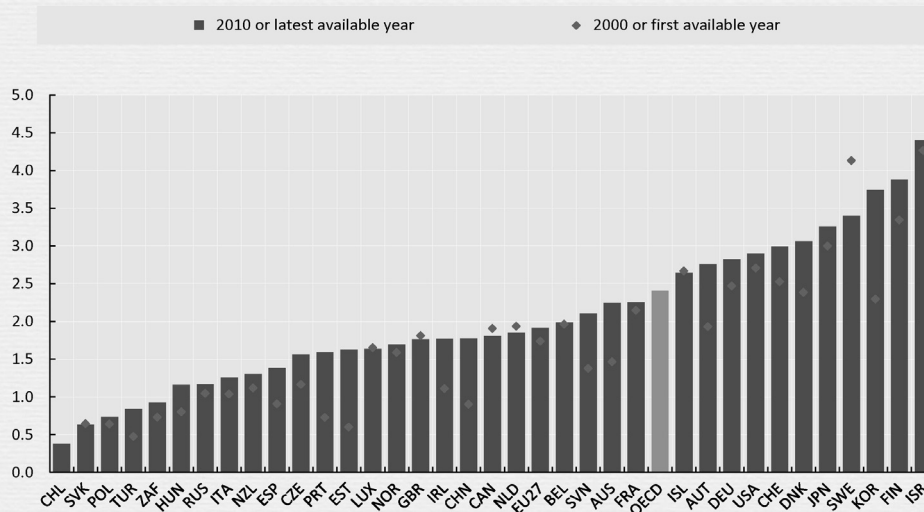
<그림 6> TFP증가율의 추이: 198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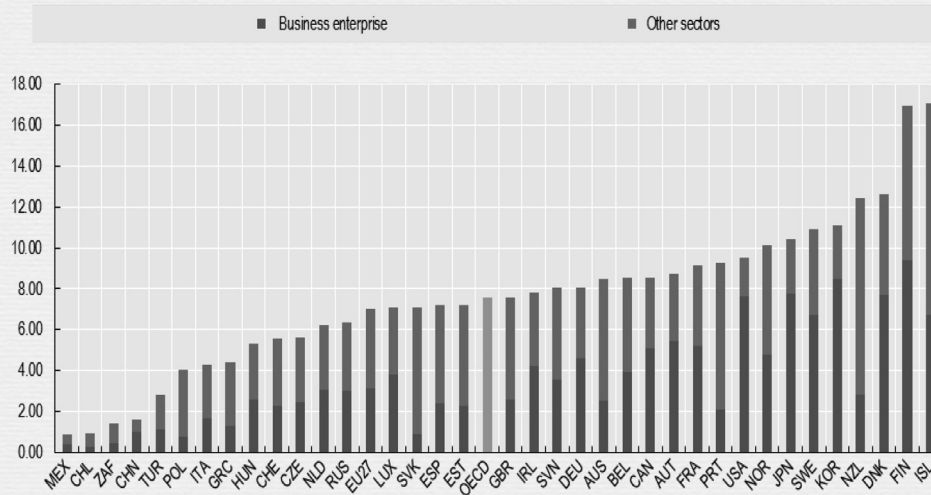
<혁신부진의 원인>

- 혁신이 부진한 까닭은 혁신자본 혹은 혁신역량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와 인센티브의 문제임
1. R&D 투자 비중이나 연구원 비중 등 혁신관련 투입지표는 세계 최상위권이며, IMD 등 국제평가나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창조경제역량 지표 평가에서도 혁신자본 혹은 혁신역량이 매우 높게 나옴
 2. 그러나 위에서 본 성장회계 분석, 계량경제학적인 평가(R&D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미국의 1/4 수준), 그리고 R&D 투자 대비 기술료 수입의 비중(1.5%로 미국의 1/3, 유럽의 1/2분에도 못 미침)이나 기술무역수지 등 성과지표를 보면 혁신의 성과는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하준경, "연구개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경제분석』 11권 2호, 2005)
 3. 이는 마치 엄청난 사교육과 대학진학을 등 교육투자에도 불구하고 인적자본의 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제도와 인센티브의 결함으로 인한 혁신투자의 비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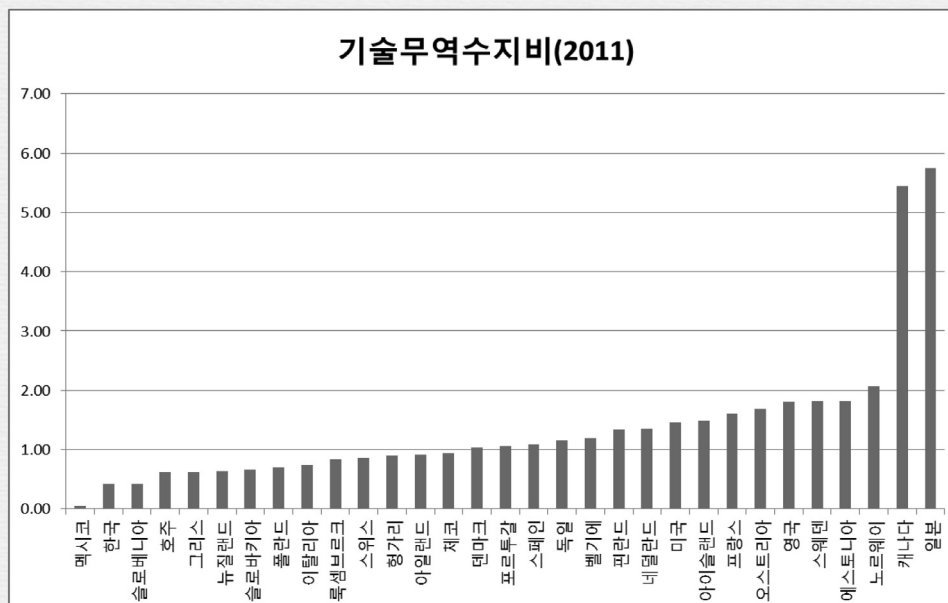
<그림 7> OECD 국가의 GDP대비 R&D 지출 비중 (%)



<그림 8> OECD 국가의 피고용인 천명당 연구원 수



<그림 9> OECD 국가의 기술무역수지(기술수출/기술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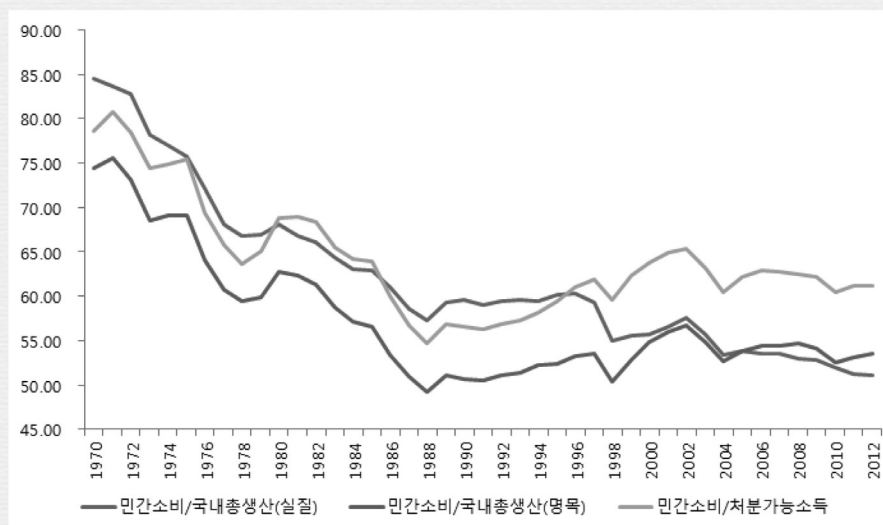


3) 저성장의 원인: 수요측면

<내수부진과 해외수요 의존 심화>

- 소비수요 감소에 따른 내수부진과 과도한 해외수요 의존
- 1. 2000년대 이후 GDP 또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민간소비의 비중이 지속 하락
- 2. 과거 70~80년대의 민간소비 비중 하락은 투자 비중 증대의 결과였는데, 최근에는 투자 비중은 불변 혹은 약간 하락
- 3. 대신 수출비중은 급상승하여 대외의존도 심화
- 4. 글로벌금융위기나 중국경제 불안 등 해외여건 악화에 매우 취약

<그림 10> 민간소비/GDP의 추이: 1970~2012



<그림 11> 총수출/GNI의 추이: 198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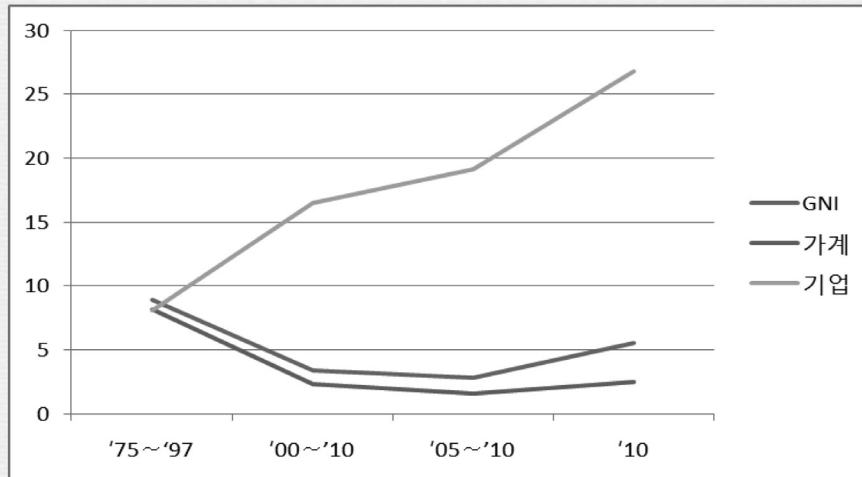
GNI대비 총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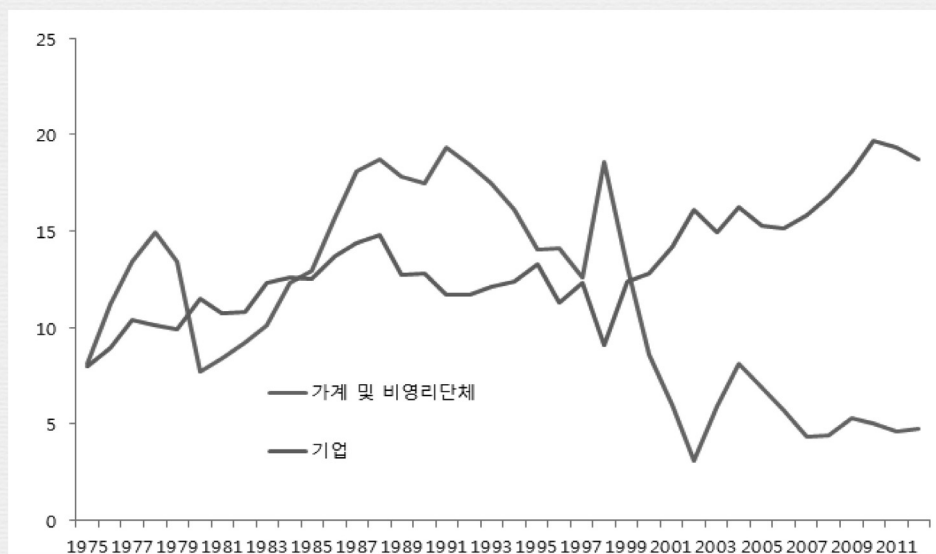
<내수부진의 원인: 분배구조의 변화>

- 소비수요 감소에 따른 내수부진과 과도한 해외수요 의존
1. 2000년 이후 기업소득은 급증하고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
 2. 민간소비의 저하에도 불구하고, 가계저축이 증가는커녕 급락하고 오히려 가계부채 급증. 반면 기업저축 급증
 3. 가계소득 증가의 부진은 생산성 증가와 괴리된 실질임금의 정체와 이에 따른 노동분배율의 하락,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빈곤화 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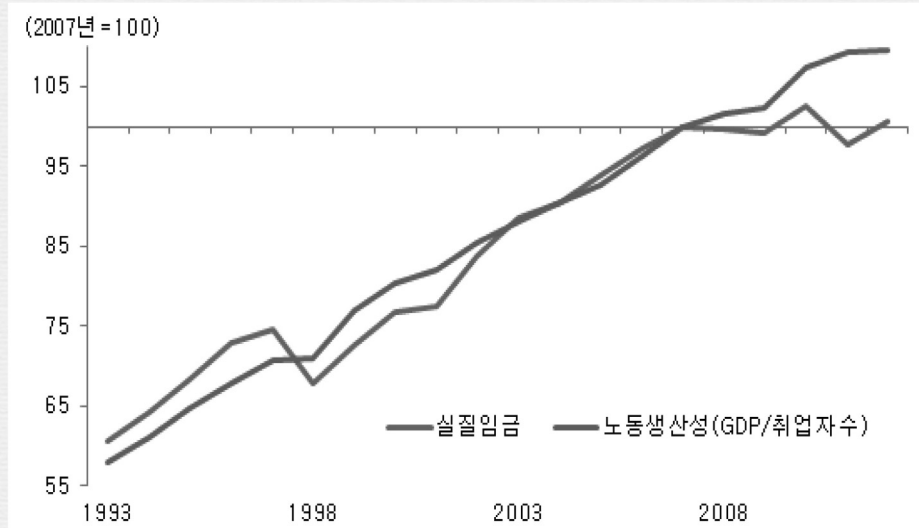
<그림 12> 가계소득, 기업소득, GNI 연평균 증가율 추이: 197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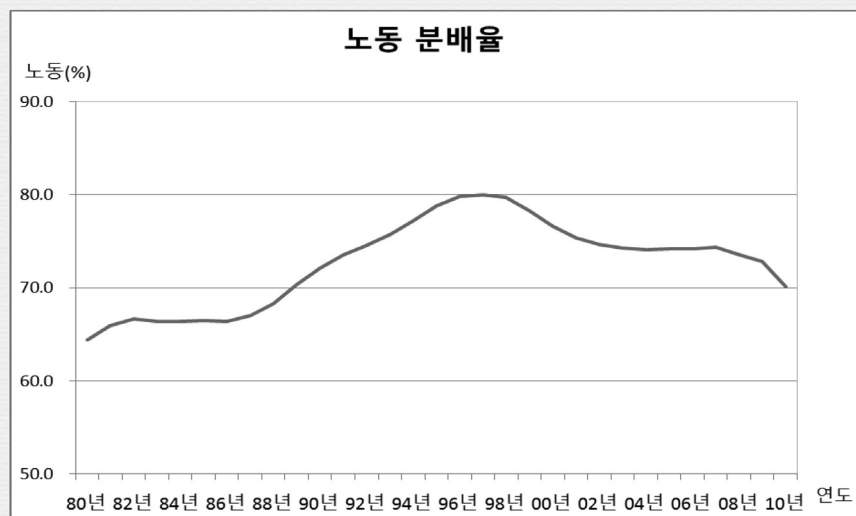
<그림 13> 가계 및 기업 저축률 추이: 1974~2012



<그림 14> 평균 노동 생산성 및 실질임금 추이: 1993~2012



<그림 15> 기업부문의 노동분배율 추이: 1980~2010



주: 김동석 등 (2012) 추정치

3. 성장체제 전환과 창조경제

1) 성장체제 전환의 지체

<성장체제 전환이란?>

- 근대경제성장의 두 단계와 성장체제(growth regime)
- 1. 자본축적에 의한 성장은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에 의해 악화될 수밖에 없고, 지속가능 성장의 원천인 생산성 증가는 기술 발전, 규모의 경제, 자원배분의 효율성 향상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발전
- 2. 근대 경제발전의 초기에는 물질 자본축적이 성장의 주된 동력이지만, 갈수록 인적 자본과 기술 혁신 등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주된 동력이 됨
- 3. 이를 통상 요소투입형 성장단계와 혁신주도형 성장단계로 분류하는데, 각각의 단계는 노동-분배체제와 맞물려 상이한 성장체제를 구성 (Hayami는 1단계 Marx형 성장과 2단계 Kuznets형 성장으로 구분하고, 노동-분배구조를 포함한 각각의 전형적인 현상을 적시)Aghion and Howitt 등은 개발도상국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체제의 전환이 필수적임을 강조 (Aghion, P. and Howitt, P. W. (2005) "Growth with Quality-Improving Innovations: An Integrated Framework," Aghion, P. and Durlauf, S. N. eds. *The Handbook of Economic Growth*. vol. 1, Elsevier, Amsterdam)

<표 1> 근대 경제성장의 두단계

	1단계 (Marx형 성장)	2단계 (Kuznets형 성장)
일인당소득 및 노동생산성	증가	증가
일인당자본 및 자본장비율	증가	증가
자본-산출 계수 (K/Y)	증가	하락(혹은 불변)
노동분배율	하락	증가
저축률	증가	불변
임금률	불변	증가
TFP의 성장기여 비중	낮음	높음

출처: Yujiro Hayami, *Development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 133.

<성장체제 전환의 지체요인>

- 한국경제에서도 인적자본과 혁신자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TFP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혁신의 성과가 부족하고 기술 의존에서 탈피하지 못하여 성장체제 전환의 속도가 느림
- 1. Hayami는 모방형 경제의 경우 과도하게 자본집약적인 기술의 사용 (Gerschenkron), 표준화된 대량생산(Vernon) 등으로 인해 성장체제 전환이 지체 된다고 주장 (미국<일본<한국)
- 2. 즉, 추격형(모방형) 경제에서 선도형(창조형) 경제로의 전환 지체가 문제
- 기존 체제 하 기득권자의 관성과 저항에 의한 체제전환 지체 (성장체제 전환의 정치경제학)
- 1. 한국의 경우 90년대에 재벌들의 규모경쟁에 따른 과잉중복투자가 전형적인 사례이며, 복지국가의 지체도 같은 맥락
- 2. 또한 노조의 강화와 임금상승에 고용회피와 자동화 투자로 대응함으로써 숙련 기반 현장형 혁신을 약화시키고 동시에 분배구조를 악화시킴

2) 성장체제로서의 창조경제 실현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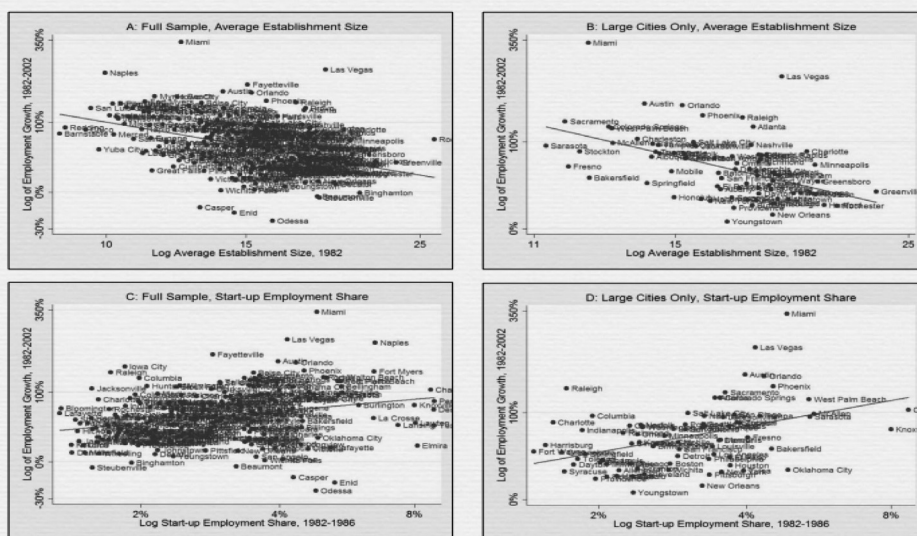
<혁신과 창조를 위한 유인 제공>

- 혁신부진의 원인은 혁신자본의 부족이 아닌 인센티브의 문제임을 앞에서 지적
- 1. 흔히 혁신과 창조의 유인을 위해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장하는데, 저작권이나 특허권 강화는 경쟁을 억압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는 효과 때문에 오히려 혁신과 창조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대세 (Boldrin, Michele, and David K. Levine. 2013. "The Case against Paten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7(1): 3-22.; Heidi L. William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Innovation: Evidence from the Human Geno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1:1)
- 2. 어려움과 위험이 따르는 혁신과 창조가 아닌 손쉬운 돈벌이의 기회가 축소되는 것이 중요: '갑질'(교섭력 우위를 바탕으로 약탈적 거래 강요), '삼질'(토건을 비롯 정부에 대한 영향력으로 바탕으로 사업), '돈질'(돈이 돈을 버는 투기) 등 '3질'의 축소 필요
- 3. 혁신과 창조를 위한 충분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술 빼앗기나 납품단가 일방적 인하 등을 근절하고 독점적 산업구조를 최대한 경쟁적 산업구조로 개편하며, 아이디어와 기술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개혁이 되어야 함: 이는 단순히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민주화의 문제임

<그림 16> 큰 나무 효과



<그림 17> 기업가정신(사업체규모, 창업고용비중)과 고용증가의 도시간 비교: 1982-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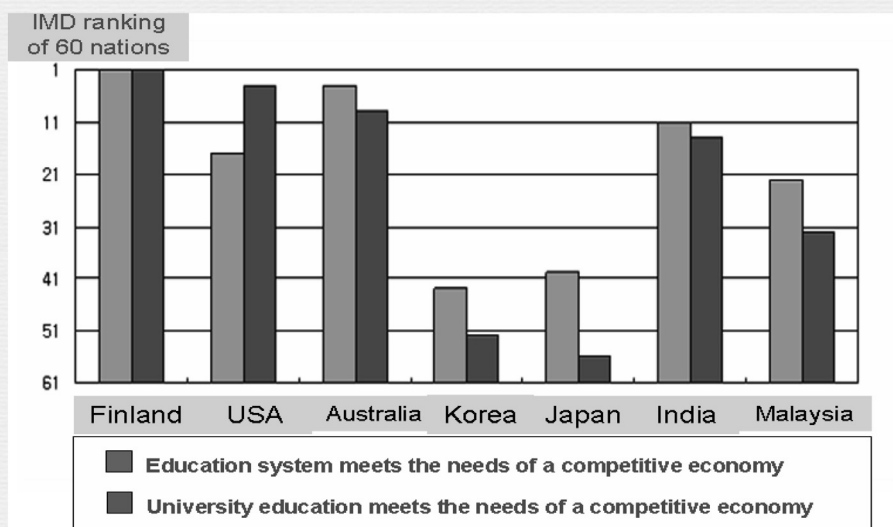


출처: Glaeser, Edward, Sari Kerr, and William Kerr (2012), "Entrepreneurship and Urban Growth: An Empirical Assessment with Historical Mines", *NBER Working Paper* 18333.

<교육과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서열화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함
 1. 융합 콘텐츠 교육 등 부분적 개혁은 입시경쟁과 서열화 교육으로 인한 호기심과 배우는 기쁨의 파괴, 이에 따른 창의성 파괴를 막을 수 없음
 2. 시험을 최대한 없애고(가급적 대학평준화까지), 4지선다형 시험은 완전 폐지하고, 주입식 교육을 토론식 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선
-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원배분과 평가시스템을 개혁해야 함
 1. 당장 돈 되는 것만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지적 탐구를 위주로 하는 기초연구를 경시(서열화 교육과 일맥상통), 향후 기초과학과 인문학 육성, 기반기술과 원천기술에 대한 장기적 연구 지원 필요
 2. 현장의 기술인력과 협력하면서 진행되는 mid-tech 분야의 R&D보다는 연구논문 발표에 유리한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에 치중, 향후 첨단형 전략산업과 전통적 지역산업의 유기적 연계 추진
 3. 단기적인 성과평가로 인한 연구의 왜곡(건수 위주의 특허와 논문) 지양

<그림 18> IMD의 교육경쟁력 순위(60개국)



<노동과 복지 및 사회적 자본>

- 창조경제와 노동 및 복지: 존 호킨스, “창조경제가 사회적 복지와 노동 문제까지 아우를 수 있는가를 잘 살펴야 한다”, 5.30 KISTEP '제4회 창조경제 포럼'
- 1. 자동화와 비정규직화에 의한 임금비용 감축 전략을 수정하여 고속련과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high road로 가야 함
- 2. 실패해도 재기가 가능하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의 실패가 미래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 필요
- 창조경제는 아이디어와 지식의 교환과 공유를 촉진해야 하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요구
- 1. 공적 권위의 신뢰성 상실과 경제시스템의 불공정성 만연으로 인한 사회적 신뢰와 협력의 결여가 창조경제의 큰 걸림돌임

3)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전략의 문제점

<성장체제 전환인가, 산업정책인가>

- 개념적으로는 성장체제 전환에 근접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에 있어서는 구태의연한 산업정책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 1. 모피아, 재벌 등 기득권과 '줄푸세' 등 고정관념의 영향력으로 근본적 체제전환보다는 걸맞기 식 대책에 정책효과가 미약할 가능성
- 2. 구체적 정책은 과거 정부가 하던 ICT 등 특정산업 키우기, 벤처육성정책 등을 재탕하는 산업정책이 많음
- 3. 성장체제 차원에서 보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창조경제와 불가분의 조합을 이루는데, 정부는 이들을 병렬적이거나 심지어 긴장관계로 인식하여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가 위축될 가능성
- 4. 창조(혁신) 측면과 노동-분배체제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 부재
- 산업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한 신중한 고려 위에 설정해야 하며, 'picking winners' 등 과도한 개입은 위험 (Lerner, Josh (2009), *Boulevard of Broken Dream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 과거 벤처육성정책, 신성장동력 육성정책, 콘텐츠 및 게임산업 진흥정책 등 수많은 산업정책들이 부작용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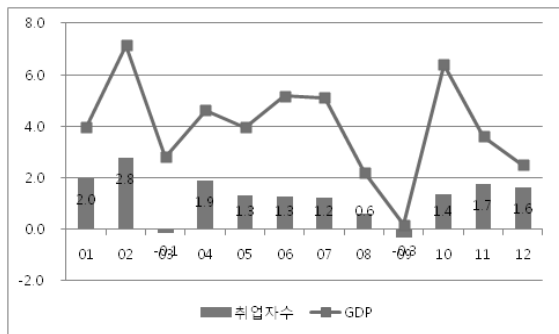
토론문 ⑤

토 론 문

허 재 준 고용정책연구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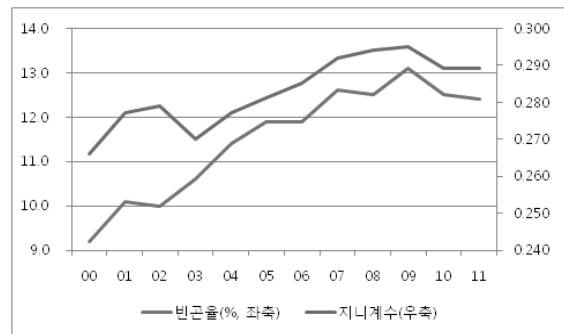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 복지욕구 분출의 배경은 급속한 기술진보로 인한 양극화 경향 등 세계경제의 새로운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경제의 분배구조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임
 -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과거보다 더 저하함에 따라 이명박 정부 5년간 고용증가율도 상응하게 감소하였음(그림 1)
 - 경제위기로 인한 노동시장 성과가 기대 이하에 미치지 못하고, 빈곤율도 증가했지만(그림 2), 그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체계 개선에 관해서는 팔목할 만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했음
 - 그 이유는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이고 높은 성장을 달성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성장률을 높이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복지문제도 해결된다고 보았을 뿐 과거 복지제도의 유산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임
 - 악화된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주체들간의 이해 조정에도 성공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임



〈그림 1〉 성장률과 취업자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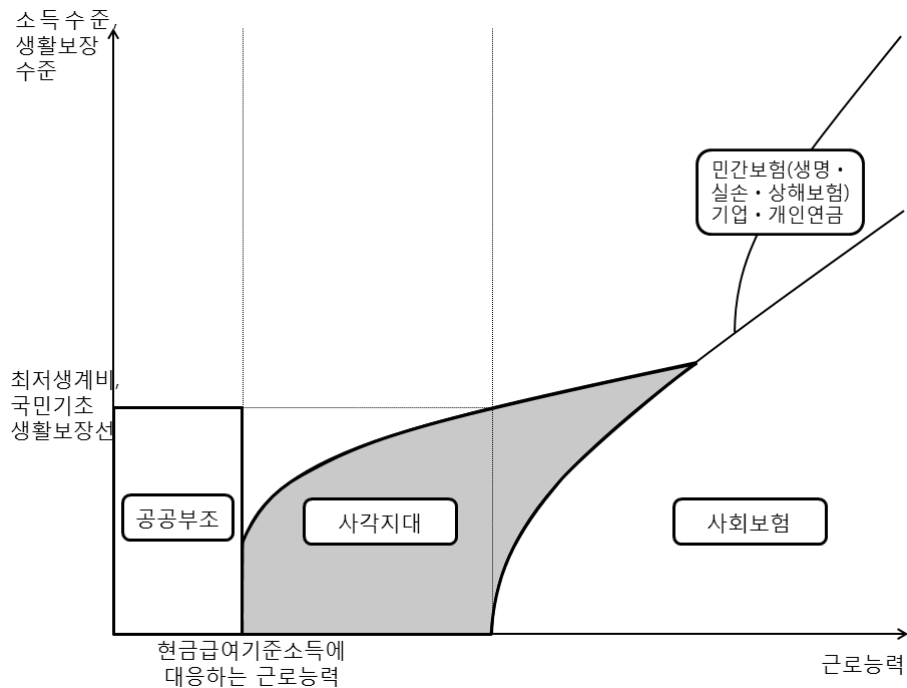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상대빈곤율과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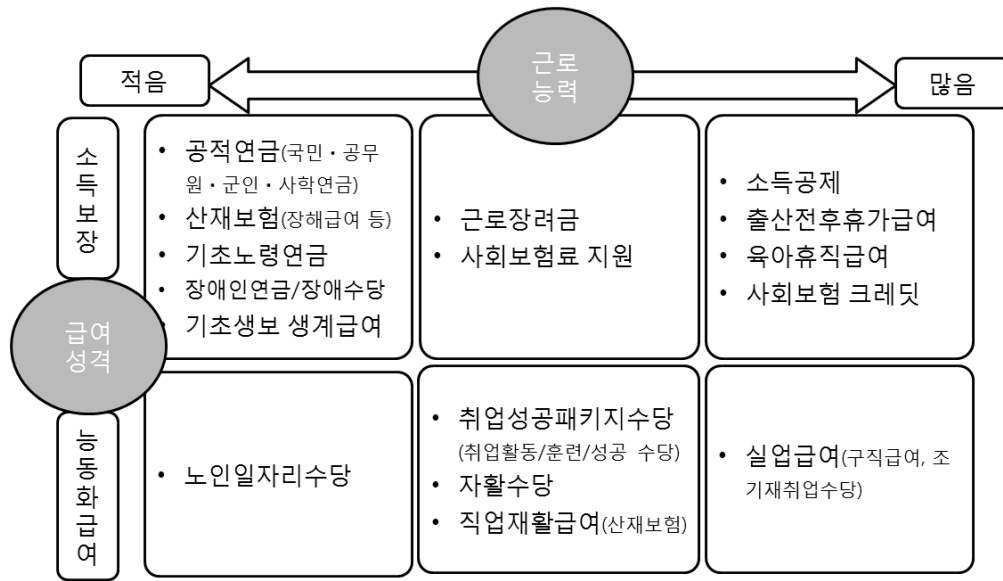
주 : 2인이상 도시근로자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 KLI 노동통계 2012

-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양대 안전망으로 하고 소득공제 혜택과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이를 보완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사회보호체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함께 복지프로그램의 수혜대상이 편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그림 3).
 - 하지만 공공부조의 포괄범위가 넓지 않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커서 보완적 복지프로그램들이 공공부조의 수혜자나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중복되는 경향이 존재함
 - 소득공제 형식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사회보험 수혜자에게 주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자일수록 더 높은 혜택을 누리는 형태로 되어 있음
 -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은 주로 근로능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고 이들 가입자들은 소득공제의 형식으로 불입금 일부를 환급받음(그 규모는 법이 정하는 소득공제 상한에 자신의 소득세 한계세율을 곱하는 만큼이므로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가구들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아닌 타 법령에 의해서도 각종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등 여러 법령이나 부처의 복지프로그램은 최저생계비 이하자에 대해 집중되어 있음



〈그림 3〉 현행 한국의 사회적 보호체계의 구조

- 이러한 특징은 과거 경제개발과정에서 확립된 복지체계의 유산으로서 과거와 달리 복지욕구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정책과제임
- 노동시장 참여자 중 사각지대에 있는 참여자들을 줄이는 일은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및 현물급여에 대한 이들의 접근성을 높여 복지의 보편성 정도를 높이고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제에서 지급되는 현금급여는 근로능력의 유무(有無) 내지 다소(多少)의 차원과 급여수령조건이 주어지는 소득보장급여 내지 노동시장 참여능력 제고와 관련된 능동화 차원에서 [그림 4]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이러한 현금급여의 구조를 통찰하여 적절히 다른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해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근로빈곤층을 줄이는 일은 한국형 복지국가 전략의 중요한 실행 계획 중 일부이자 노동시장정책 내지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과제임



〈그림 4〉 근로능력정도와 급여 성격에 따른 현행의 현금급여 구조

- 주 : 1)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득보장의 의미보다는 비공식 저임금 일자리를 공식적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되고 있지만 소득보장급여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소득지원을 하여 공식화를 유인한다는 의미에서 소득보장성 급여로 분류하였고, 최저임금제도는 소득보장의 의미를 갖는 제도이지만 임금에 관한 규제로서 명시적 급여가 아니므로 포함시키지 않음
- 2) 실업급여는 전통적으로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수단이자 소득보장의 의미가 크지만 IAP 등을 통해 능동화 프로그램과 연결되어가는 경향이 강하고 실업인정과정이 이를 지향해야 한다는 장기적 의미부여를 포함하여 능동화(activation) 급여로 분류함

부 록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및 토론회
관련 기사

토론회 개최 연혁

1.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개최

- ☐ 일시 : 2009. 12. 10 오전 11시
-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주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 ☐ 주제 발표 : 강욱모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토론자
 - o 김병숙 교수(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o 김창남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 o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 o 정무성 교수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 축사 :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한성디지털대학교 전 총장)

2. 제2차 토론회 개최

- ☐ 일시 : 2010. 2. 25
- ☐ 장소 :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 ☐ 주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 ☐ 주제발표 : 백종만 학장(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 토론자
 - o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 o 장향만 사무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지역복지과)
 - o 이애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o 장윤영 도의원 (한나라당)
 - o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 ☐ 축사
 - o 장석권(전 단국대학교 총장)
 - o 김경우 회장(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3. 제3차 토론회

- ☐ 일시 : 2010. 07. 12
-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

☐ 주제 발표 : 정무성 원장 (전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토론자

- o 박현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 o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 o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 o 박찬민 총괄실장(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o 윤준현 대표(주)에이스푸드
- o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예비사회적기업)

☐ 축사 :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 축사문

- o 오세훈 서울시장
- o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 1부 사회 : 이승훈 교수 (국제대학교)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MBC 뉴스 토론회촬영상

4. 제 4차 토론회

☐ 일시 : 2010. 10. 1

☐ 장소 :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 주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 주제발표 : 최성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 토론자

- o 나임순 교수 (백석대)
- o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 o 곽순현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o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 축사 : 차홍봉 전 보건복지부장관(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제5차 토론회

- ☐ 일시 : 2011. 2. 17
 -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 ☐ 주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합의 와 향후과제’
 - ☐ 주제발표자 :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 ☐ 토론자
 - o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 o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o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 o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 ☐ 축사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 o 차홍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 o 오영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 ☐ 축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 (테너)
 - ☐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 후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 *언론홍보 mbc뉴스토론회 폴영상,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데일리, 조선일보

6. 제6차 토론회

- ☐ 일시 : 2011. 6. 14
-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주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 ☐ 주제발표 : 김용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토론자
 - o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o 이기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 o 우재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 o 최용민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 ☐ 축사
 - o 김성이(前보건복지부 장관)
 - o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 언론 홍보 :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7. 제7차 토론회

☐ 일시 : 2011. 9. 27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주제발표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 토론자

- o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o 홍백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o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 o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전무)

☐ 축사 : 심윤종(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 1부사회 :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 후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언론 홍보 : 뉴시스 및 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 기사

8. 창립 2주년 기념 및 제8차 토론회

☐ 일시 : 2011. 12. 20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 주제발표 :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 토론자

- o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 o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 o 곽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 o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 안명옥 (전국회의원/나눔공동체)

☐ 축사

-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 추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캣츠〉

☐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 언론홍보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9. 제9차 토론회

☐ 일시 : 2012. 3. 9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 주제발표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토론자

-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 허준수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축사

- 조성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박인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 구본홍 사장 (CTS 기독교TV)
- 최란 이사장(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 협 찬 : 대구은행

*** 언론 홍보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10. 제10차 토론회

- ☐ 일시 : 2012. 6. 26 오후 2시
 -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주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 ☐ 주제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토 론 자
 - o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 o 이의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 o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 ☐ 축사
 - o 심윤중 총장 (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 o 임성택 총장 (그리스도대학교)
 - ☐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본 연구회 이사)
 -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 후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 *** 언론 홍보 :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11. 제11차 토론회

- ☐ 일시 : 2012. 10. 25 오후 2시
-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주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 ☐ 주제발표자 :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토론자
 - o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o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o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 o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 o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 o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 ☐ 축사
 - o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 o 유양근 (부총장/ 본 연구회 고문)
- ☐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후원 : 홈페이지

12. 제12차 토론회

☐ 일시 : 2013. 3. 7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자 :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론자

o 김동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o 정은상 님 (일반시민패널 공모선정)

o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o 김명훈 박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

o 신성식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축사

o 차홍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o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 (전 법무부 장관)

o 김영래 총장(동덕여자대학교 /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o 오제세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후 원 : 국민건강보험

토론회 관련 언론 기사



“새정부 복지재원 위해 증세방안 마련해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새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양한 증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을 제도적으로 증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복지 재정에 135조원이 소요된다고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사회보장 공적지출 비율이 10% 미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보장 공적지출 비율을 늘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도 “고소득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은 보수층과 경제단체의 반발을 부르겠지만 복지가 확대되는 만큼 세금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히 알리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복지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인 우리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34% 정도로 점차 올려야 한다고 설득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gogo@yna.co.kr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니투데이 이재운 기자 | 입력 : 2013.03.07 15:04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7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창립 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복지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고용안전·노인복지·저소득층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새정부에 필요한 복지 정책 방향으로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 서비스의 계층별 제공 △빈곤층 등 사각계층 해소 △복지전문가의 활용 방안 △사회복지사의 노동조건 개선 △복지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단기적인 예산절감이나 소득공제 축소 등의 임기응변식 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간의 연계성 확보와 최저임금과 최저생활보장의 현실화 등 실질적인 복지 정책 마련



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논의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실장도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도 더 세밀하게 추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며 “6년 연속 적자를 겪고 있는 국내 재정 여건에서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해선 “증세의 필요성과 재정적 부담과 국가의 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일반인도 토론에 참여해 새 정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상 씨는 “정부는 국민에게 막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과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예산과 인력만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회패널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김명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도위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정숙 연구회 회장은 “박근혜정부가 4대 복지 추진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운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시사코리아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방향과 문제점’ 진단 토론회

새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으며,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양한 증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오후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강당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는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 대비 9.4%로 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멕시코(8.2%) 다음으로 낮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합당하게 현재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률이 62.7%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며 국민의료비에서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58.2% 수준에 머물러 OECD 평균에 비해 14% 정도 낮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비급여 의료항목의 증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만성 질환이나 중증의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빈곤화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 문제에 대해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현재 민간기관 중심의 보육전달체계를 지양하고 국립과 공립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보육체계의 공공성을 보다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해 “2010년 현재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 수준이지만, 독일은 36%, 스웨덴은 46%, OECD 평균은 34%에 달한다”며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소득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은 보수층과 경제단체의 반발을 부르겠지만 복지가 확대되는 만큼 세금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히 알리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차홍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새 정부가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허관우 기자 (ted27@sisakorea.kr)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방향’ 토론회 열려

등록 일시 [2013-03-07 16:53:53]

【서울=뉴시스】 이득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은 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강당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는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 대비 9.4%로 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멕시코(8.2%) 다음으로 낮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합당하게 현재의 사회복지지출

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률이 62.7%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며 국민의료비에 서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58.2% 수준에 머물러 OECD 평균에 비해 14% 정도 낮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급여 의료항목의 증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만성질환 이나 중증의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빈곤화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시 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육 문제에 대해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현재 민간기관 중심의 보육전달체계를 지양하고 국립과 공립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보육체계의 공공성을 보다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해 “2010년 현재 세 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 수준이지만, 독일은 36%, 스웨덴은 46%, OECD 평균은 34%에 달한다”며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의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차홍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새 정부가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leeds@newsis.com



“복지재원 부족..증세해야” “사회복지세 신설도 검토할 필요..국민 설득 필수”

입력 : 2013-03-07 오후 6:44:1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복지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단기적인 예산절감이나 소득공제 축소 등의 임기응변식 방안으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규모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나 법인세, 부유세 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증세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사회복지세의 신설이나 부가가치세의 인상 등 증세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과 재정의 부담, 국가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만큼 거꾸로 조세부담률도 낮다”며 “경제를 무시하고 복지만 강조하면 경제성장에 있어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뉴스천지
newscj.com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토론회 개최

장수경 기자 | jsk21@newscj.com

2013.03.07 16:02:56



▲ 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 성공 위해선...”

입력 2013.03.07 15:06

[이재운기자 MTON@]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7일 새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재운 기자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7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창립 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복지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고용안전·노인복지·저소득층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새정부에 필요한 복지 정책 방향으로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 서비스의 계층별 제공 △빈곤층 등 사각계층 해소 △복지전문가의 활용 방안 △사회복지사의 노동조건 개선 △복지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단기적인 예산절감이나 소득공제 축소 등의 임기응변식 방안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간의 연계성 확보와 최저임금과 최저생활보장의 현실화 등 실질적인 복지 정책 마련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논의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실장도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도 더 세밀하게 추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며 “6년 연속 적자를 겪고 있는 국내 재정 여건에서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해선 “증세의 필요성과 재정적 부담과 국가의 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일반인도 토론에 참여해 새 정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상 씨는 “정부는 국민에게 막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과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예산과 인력만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패널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김명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도위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정숙 연구회 회장은 “박근혜정부가 4대 복지 추진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새정부 복지 공약 실현 위해 증세방안 필요”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토론

김소정 기자(bright@dailian.co.kr) 기사더보기

등록 : 2013-03-07 19:18

새 정부의 복지 공약 실현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증세없는 복지 재원 조달은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토론의 쟁점은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주제를 발표한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적 예산절감이나 소득공제축소 등 임기응변식 방안으로는 적정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에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새 정부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유세 확대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박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증세 방안에 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소위 나쁜 기업가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도 영향을 받는다”며 “이런 부작용은 미리미리 살펴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복지세의 신설이나 부가가치세의 인상 등 증세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며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6년 연속으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복지가 중산층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증세 필요성과 재정의 부담, 국가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는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실현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약을 만들 때 재정추계를 보수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135조원이 든다고 했지만 사실상 150조에서 많게는 20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 기자는 아울러 “증세를 하지 않고서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조달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대책으로는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국민을 설득해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은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 부담률을 지적했다. 북유럽, 특히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언급하며 “적게 받고 적게 내는 체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북유럽처럼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체계로 갈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자체만 강조하면서 제도를디자인한다면 그 비용은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안 = 오세현 / 문은혜 / 박소희 / 김평호 기자]



“진정한 복지국가는 고용확대보다 사회보장체계 구축”
허준수 교수, “재취업교육 등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보호가 우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제3주년 기념 복지정책 토론회서 주장

김인수 기자

등록일 : 2013-03-10/수정일 : 2013-03-11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고용확대보다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Social Risk)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주제의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고용이 확충된다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외국의 경험들 살펴보면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국민의 삶의 질이 저절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됐을 때에 진정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 급여기간의 확충과 급여의 현실화, 실업기간 동안에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과 적합한 취업정보 신속한 제공 등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과 훈련에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학력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 가능한 산업계 관련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보다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나 3D업종에 적정임금을 제공 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제도를 향상시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부중심의 거버넌스를 지양하고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도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지역공동체, 나아가서 복지국가로 향해 가는 데에 매우 필요하다” 강조했다.

그는 또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규모에 부합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유세 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증세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시민페널 공모로 선정된 정은상 씨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국가의 할 일에 대해 주문했다.

정 씨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다.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국민에게 막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과 일자리는 국가가 다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 복지예산과 인력을 계속 늘리는 것, 고학력자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사회복지세 신설이나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 방안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과 재정의 부담, 국가경제적 위험 요인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is()**

[뉴시스아이즈]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시민이 관심 가져야 복지국가 된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618_0011201273&cID=11203&pID=11200

기사등록 일시 [2012-06-18 15:28:08]



【서울=뉴시스】 이득수 기자 = 복지문제는 경제민주화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연말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꼽히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경쟁적으로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국가재정의 능력으로 감내해낼 수 있는 것인지,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없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시급한 부문에 배정해야 할 한정된 자원을 복지에 쏟아 붓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혁, 좌우 이념에 따라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민간단체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중도적 입장에서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탐구를 전개해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작은 단체이지만 매년 3~4회의 토론회를 열어 복지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며 콘텐츠를 축적해오고 있다. 26일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중앙대 경영학과 신인석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 이의영 상집위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와 질의응답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연구회를 설립해 3년째 이끌고 있는 이정숙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을 비롯해 그의 복지관을 들어봤다.

- 선진사회복지연구회를 설립한 취지는?

“우리 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복지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연구회는 2009년 10월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우리나라도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창립했다. 이념을 초월하고 정파를 떠나서, 또 복지의 전문가 비전문가, 종사자 비종사자 등 복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본 연구회에 구성원이 되어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며 출범했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나라 복지현안에 대해 고민과 정책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회의 이런 작은 몸짓이 나비효과랄까? 복지는 일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정책이라 여겨졌던 것이 국가 중요 어젠다로 떠오르며 그 수혜대상자도 중산층까지 확대 될 정도가 되었고 온 국민이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 연구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이자 목표이다.

또 우리나라 복지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고민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회가 끝난 후엔 발표 자료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시리즈’로 매주 7200명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제 벌써 42회까지 나갔다. 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카페, 학회에도 올려 토론회 당일 시간을 못 내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복지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을 갖도록 귀한 토론 자료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 이 회장에서 생각하는 ‘선진사회복지’란?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홍보차 내한해 한 대학의 노천극장에서 열린 강의를 한 적이 있어 참석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공부를 하게 한 강의였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즉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 되고 이루어지는 사회가 돼 가는데 우리 인간의 가치, 규범, 도덕, 꿈과 희망은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의해, 또 돈에 의해 박탈돼서는 안 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 복지, 선진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 정부의 복지정책과 총선에서 앞 다퉈 내놓은 복지공약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 2012년 내년 총지출예산 326조1000억원 중 28.2%인 92조원이 복지예산이다. 또 (2000~2007)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 평균 14.2% OECD 국가 평균 6.3% 대비 2.3배 높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복지국가 반열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2007년)은 아직도 GDP대비 8.1%로 OECD 평균(19.8%)에 비하면 더 확충해야 한다.

국민들의 복지체감온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13개 부처에 걸쳐 230여개의 복지프로그램이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연계성과 통합성이 낮아 중복이 되거나 누수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현장 방문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전달체계상에서의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각 당,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복지와 관련해 많은 정책을 내 놓았다. 실천이 문제다. 가급적이면 꼭 실천해야 한다. 만약 그 당시 한 표가 아쉬워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공약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 정치권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기 때문이다.”

- 최근 사회복지계를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 찾기가 한창이다.

복지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를 돈으로 다 해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퍼주기만 한다면 도덕적 해이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자활자립할 수 있게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재임 8년간 일자리 1600만개를 창출하고, 2800만명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업적 때문에 지난해 말 퇴임하면서 지지율이 87%에 달했다. 그 비결에 대해 “정치가 뭐냐고요? 어머니의 마음이죠”라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성을 가지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복지에 대해 논리나 말의 성찬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 즉 복지가 먼저냐를 따지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선진복지국가의 모델인 스웨덴도 복지를 아주 성공적으로 실현하면서도 5.5%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면 투명한 사회, 신뢰의 정치,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문제가 심각하다. 해법을 조언 한다면?

“우리나라는 2010년 인구 11%가 노인인구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거기다 작년부터 은퇴가 시작된 712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 중에 건강문제가 43.6%, 경제적 어려움이 38.4%(2008년 통계청)로 나타났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노인 의료비 점유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정력을 가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노인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노후준비교육 등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노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령자 재취업,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했는데....

“이태백, 사오정, 삼포시대, 허니문푸어, 하우스푸어 등 수많은 신조어는 고용의 질과 양의 불안에서 생겼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2.2%로 치솟았고 켄거루족, 신 켄거루족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의 좌절, 분노, 자포자기는 자살과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으로 표출 되어 사회불안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고용과 복지는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소득배분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작동할 때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산출한다고 한다. 이런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창업지원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본다.

–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는지?

“정치권에서는 헌법 119조를 근거로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경제민주화가 돼야만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복지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이고 경제민주화는 미시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분도 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께서 제기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논의는 다소 있었지만 정작 복지학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논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복지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고자 2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토론회를 가지려 한다.

leeds@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스 제282호(6월25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2012년 3.9분 연구회 주최 토론회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
관련 언론 기사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280342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선진사회복지연구회,
‘복지와 고용이 함께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조성완 기자 (2012.03.13 20:36:43)

◇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를 열고 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제공

4·11총선을 앞두고 복지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과 고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돼 상호 보완성을 가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복지 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면서 “복지가 고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 친화적 복지가 돼야 하며, 고용 또한 복지 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란 노동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의 배분과 복지를 통해 이뤄지는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작동하도록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복지가 총선과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 확실시되자 복지와 고용의 융합을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중핵이며 납세자인 다수의 임금근로자와 자영근로자를 포괄하는 복지여야만 진짜”라고 강조했다.

이정환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도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 중 하나이며,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힘을 실었다.

이 과장은 해결방안으로 고용을 중심으로 한 일을 통한 복지, 노동시장참여형 복지 체제를 구축해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가칭 ‘고용주도형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및 국민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은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가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비정규직의 양산과 과도한 사내하청의 증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시장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8546>



총선 앞두고 “복지 제대로 알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선심성 복지정책 경계해야”

홍경준 성균관대 교수, 박기환 국민대 교수 등 학계서 복지정책 토론

이정숙 회장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 고려해 복지정책 펼쳐야...”

최종편집 2012.03.09 00:25:12

윤희성 기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9일 오후 2시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박기환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회장은 “이상적인 복지는 없지만 합리적인 복지는 있다고 빔 록 네덜란드 총리가 말했다”며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복지정책을 토해내는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은 정치인들 스스로의 입지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 이 회장은 “선거가 끝난 뒤 남발된 복지정책은 시민의 분노로 돌아와 정치인들은 바로 응징 받게 됐다”며 “각 정당은 모두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은 생각하며 복지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기념해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박인복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8627> 뉴데일리(2신)

퍼주는 데 정신없는 현실정치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복지, 제대로 접근해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학술포럼 개최
학계, 행정가, 연예계 인사 등 모여 복지정책 논의

최종편집 2012.03.10 00:23:57

윤희성 기자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참여자 왼쪽부터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 본부장,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이정숙 회장,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기환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과장.

지난해 무상급식 문제가 복지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겹치면서 복지 관련 공약들이 각 정당에서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장밋빛 공약들이 과연 실행 가능한 것들일까? 또 복지공약이 이름처럼 모든 서민에게 고른 혜택을 나눠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9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긴급 토론회를 주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주제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정숙 회장은 “4·11 총선을 앞두고 여, 야 할 것 없이 모든 후보들이 일자리 복지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기대하고 환영할 수는 없다”며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 국민부담 세금을 올리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 많은 예산을 감당할지 염려가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와 노동시장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사고해야 진정한 복지가 가능하다”며 “민간기업,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대응이 진정한 복지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재원은 세금으로부터 온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시장에서 1차적으로 분배되는 것도 복지의 한 부분이고 1차 분배가 진행된 뒤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해서 다시 조정되는 것이 진정한 복지지, 가난한 사람만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는 복지는 소수의 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홍 교수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간다는 것은 복지의 원천이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사람들의 소득이기에 고용 없는 복지는 존재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과장은 “서구유럽의 복지국가는 경제 성장이 최고의 위치에 올랐을 때 논의됐던 것으로 우리의 사회, 경제체계의 수준에서는 성급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복지비용도 높고 미래를 대비해 통일비용으로 만들어 뒀던 국고의 여유분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모두 다 쓴다는 것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 란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이사장과,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 축사를 하며 자리를 빛냈다.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이룩해야”

기사등록 일시 [2012-03-09 18:35:07]

【서울=뉴시스】 이득수 기자 = ‘복지와 고용이 함께 이뤄져야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명제 하에 양자의 동시 실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홍경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용노동부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과장, 국민대 경제학과 박기환 교수,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홍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복지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좌절에 빠진 우리 국민을 다시 희망이라는 기차에 태우기 위해서는 복지가 고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 친화적 복지가 돼야 하며, 고용 또한 복지 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란 “노동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소득의 배분과 복지를 통해 이뤄지는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작동하도록 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복지가 총선과 대선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이 확실시되자 복지와 고용의 융합을 말하는 사람도 늘어났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한다”며 “근로빈곤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중핵이며 납세자인 다수의 임금근로자와 자영근로자를 포괄하는 복지여야만 진짜”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부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가는 복지국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복지 거버넌스(공공행정)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박미출(일반시민 대표)씨는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이 사회와 정부에 대해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을 가로막는 주범은 재벌이라고 규정했다. 재벌이 중소기업 고용억압을 침탈해 재벌 일가의 배를 채우느라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박씨는 또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복지예산으로 취업학원과 직업전문학교에 국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이 형편없다며, 즉시 지원을 중단시키고 취업전문 기관을 대학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토론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기업 및 국민의 역할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가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하며, 기업측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및 복리후생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의 양산과 과도한 사내하청의 증가 등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노동시장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정한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은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하는 고용친화형 복지국가는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 중 하나이며, 우리사회의 도전과제를 고려할 때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공공복지에 대한 요구급증, 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새로운 성장동력 요구 등 우리사회가 처한 여러 도전과제들을 나열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고용을 중심으로 일을 통한 복지(Workfare), 노동시장참여형 복지(Activation) 체제를 구축해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성장-고용-복지가 선순환 하는 가치 ‘고용주도형 복지국가 모델을 제시했다.

leeds@newsis.com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20309153414791&p=yonhap>
연합뉴스 (1신)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열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이 사회를 보고 있다. 2012.3.9 jihopark@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47246>
연합뉴스 (2신)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

연합뉴스 기사입력 2012-03-09 15:32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열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시민 박미출씨가 토론을 하고 있다. 2012.3.9

jihopark@yna.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47245>
연합뉴스 (3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547247>
연합뉴스(4신)

<http://www.bokjinews.com/>  복지뉴스

**“배분개선 없는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경제 세계화 현실서 복지 없는 고용은 불가능
복지와 고용 유기적 결합된 친화적 정책 필요
고용확대 막는 우리경제 모순해결은 ‘재벌해체’**

시장경제에서 이뤄지는 1차 배분구조의 개선 없는 복지는 지속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경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9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홍경준 교수는 “탈공업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현실에서 복지 없는 고용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좌절에 빠진 우리 국민들을 다시 희망이라는 기차에 태우기 위해서는 복지가 고용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용친화적 복지가 돼야하며, 고용 또한 복지친화적 고용이 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또 복지과 고용이 함께 가는 새로운 복지국가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 뒷받침과 복지 거버넌스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는 정치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성장이 필수적이다. 성장은 보편적복지의 지속 가능성에도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일례로 베버리지의 보편적복지를 대표하는 영국의 공적연금제도는 저성장 때문에 연금급여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어 대부분의 중산층을 민간연금으로 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금까지의 성장과는 다른 토건과 물적자본 위주의 성장이 아니라 인적자본과 지식자본의 축적에 기초한 생산성주도 성장, 혁신 중심 성장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홍 교수는 또 복지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서는 협애한 복지 개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복지는 대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내수 창출 정책이어야 하며 고용 불안정을 억제하는 고용창출 기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연령층이 빈곤에 빠지기 전에 개입해 경제 재도약의 동력을 보존하는 미래대응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일반 시민 토론자로 나선 박미출 씨는 고용 확대를 가로막는 우리경제 모순구조 해결의 지름길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씨는 “재벌 일가의 가족 구성원인 고위 임원 1명의 연봉이면 근로자 수 십 명을 고용하고도 남음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게 해당 기업에게도 이익이 됨을 잘 알면서도 재벌들은 가족을 늘리면서 엄청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박 씨는 “공기업에서 정년퇴직한 사람이 아파트 경비직에 취업을 해 2교대 근무를 하고 받는 임금과 일하지 않고 쉬면서 받는 실업수당 중 실업수당이 더 많은 금액이라는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지한 고민 없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양산 된 위정자들의 복지정책이 낡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

또 “정부의 복지정책 관계자들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현상으로써의 복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복지는 국가가 국민에게 베푸는 혜택’이라는 대단한 착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복지는 결코 혜택이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마땅한 책임이며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덧붙였다.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은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위원장은 또 “정부중심의 거버넌스를 지양하고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도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지역공동체, 나아가서 복지국가로 향해가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snlibo.co.kr/sub_read.html?uid=24130  **성남일보** 성남일보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정책 토론회 연다

3월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송명용 영상기자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오는 3월 9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홍경준 교수(성균관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재홍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부서장, 허준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미출씨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3/07/2012030700030.html **chosun.com**

조선일보플라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4378741>

뉴시스 오늘의 일정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나눔과 봉사 토론회’ 성료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강철희 교수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적게 기부”

최종편집 2011.12.21 16:08:20



내년 총선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복지 문화에 대한 토론장이 마련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전 보건복지부 장관)와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이 축사를 하고 소프라노 이윤순씨가 축가를 불렀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선진사회복지연구회’ 2주년 기념을 겸한 올해 마지막 토론회다. 연말을 맞이하여 평소보다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는 시기이므로 기부, 후원 및 나눔과 봉사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부 금액과 기부 빈도는 부유층이 더 많이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유층이 높은 소득수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기부하고 있어 기부 노력도가 낮다”고 밝혔다.

강 교수에 따르면 2008년 국세청 통계 기준 소득 수준별 개인 기부에서는 소득 상위 90%대(최상위 100%) 부유층의 기부 노력도가 가장 낮고, 소득 20%대의 하위계층의 기부 노력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 노력도란 소득 수준 대비 기부금 비율로, 소득 20%대의 기부 노력지수는 0.79, 소득 90%대 부유층의 기부 노력지수는 0.47이었다.

강 교수는 부유층의 나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부유층의 향후 기부인향이 98.5%이고 이들이 기부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설명과 보고를 바란다”며 부유층 나눔 모형 개발, 계획기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고 주장했다.

계획기부란 현금, 부동산, 보험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기부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기부형태로서 기부자가 자신의 자산운용과 향후 계획을 수렴해 기부를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나눔단장, 안명옥 전 국회의원, 곽대석 CJ 나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사회복지 수요 확대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복지자원이 중요하다”며 민간재원의 핵심인 기업은 2010년 약 3조 원 가량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곽대석 CJ 나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사회복지 수요 확대를 충족하기 위해 민간복지자원이 중요하다”며 민간재원의 핵심인 기업은 2010년 약 3조 원 가량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곽 국장에 따르면 기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은 단체나 지역사회에 현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원봉사나 회사제품 기부, 회사 보유시설의 개방·공유 등 다양하다. 곽 국장은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활동이 ‘자원봉사’라고 말했다. 2010년 전경련 조사에 의하면 전체직원의 76%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기업이 43.2%나 된다.

곽 국장은 “사회공헌활동은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기업 역시 유·무형의 이익을 본다”며 시민, 기업 그리고 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선진사회복지연구회 나눔봉사 토론회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부금 규모가 0.8%에 불과하다고 알려진 가운데 기부현실과 앞으로의 바른 기부문화 형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창립 2주년을 맞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강철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높을 수록 평균기부금액은 높지만 소득에서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며 “고소득자의 기부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주식과 부동산, 유산 등 유무형의 자산 기부 활성화 위한 세제 개선안 마련과, 나눔의 가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재능기부를 통한 기부효율성 증대 방안 등 나눔의 주체를 다양화하고 기부문화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방법 등이 논의됐습니다.

최기영 기자

- Copyrights © CTS기독교TV. <http://www.cts.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20일 나눔 토론회

기사등록 일시 [2011-12-15 09:31:44]

【서울=뉴스시스】 강수윤 기자 =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강철희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나눔단장, 안명옥 전 국회의원, 곽대석 cj 나눔 사무국장,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특히 이날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총재(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이 축사를 하고 소프라노 이윤순씨가 축하를 부른다. shoon@newsis.com



소득 상위 10%대 시민 기부노력 “꼴찌”

기부노력, 하위 20%대 시민 0.79 vs 상위 10%대 시민 0.47

강철희 교수 “상징적 수준의 부유층에 의한 나눔 촉발” 촉구

우리나라의 개인기부금 규모가 17조원으로 추계되는 가운데 소득 수준 상위 10% 시민의 기부노력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철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창립2주년기념 제8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철희 교수에 따르면 세분화된 기부처별 기부금 서베이 분석결과 종교포함 개인기부금 규모는 2009년 총 17조4940억원으로 추계된다. 이는 GDP의 1.65%에 이른다.

강 교수는 “그러나 소득계층별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시민의 경우 특히, 소득수준 상위 10% 시민의 기부 노력 정도가 가장 낮았다”고 주장했다.

소득 수준별로 기부노력의 정도는 소득수준 하위 20%대 시민이 0.79%p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위 40%대는 0.65%p, 하위 60%는 0.57%p, 하위 80%는 0.48%p였으며, 하위 90% 즉, 상위 10% 시민은 0.47%p로 기부노력의 정도가 가장 낮았다.

반면 미국의 경우 전체 기부규모 중 개인 75%, 재단 13%로 개인의 비중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기부 중 상위 1~5%에 속하는 부유층의 나눔의 몫은 35~50%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는 등 이들에 의한 기여가 절대적이다.

강철희 교수는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부유층에 의한 모범적 모형의 실재를 관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미국과 같이 상위 부유층 1%에 의한 개인 나눔규모 중 35%까지의 기대는 가능하지 않으나 일정한 상징적 수준의 부유층에 의한 나눔 촉발이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의 나눔행동은 계층간 사회적 거리의 간극을 좁히고 사회자본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교수는 또 기부 활성화를 위해 ▲부유층 나눔모형의 개발과 촉진 ▲유산기부의 확대 및 계획기부 촉진을 위한 제도 도입 ▲정기적 나눔 실천 및 나눔교육의 제도화 ▲세금혜택 등 관련된 제도적 유인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도 개인기부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최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 확대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확대됐으며,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또한 확대돼 나눔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확대와 더불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 지역의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세법상 용역기부를 자원봉사 등에 확대하는 등 물질적 나눔 뿐만 아니라 재능 또한 나눌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도입된다면 일대 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은 “여론조사에서 58.3%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바라고 있다”면서 “기부문화가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에서 더 모범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나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기부단체의 자금운영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길 한국여자농구연맹 총재는 “기부문화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할 때 아직 세상이 더 살만하다는, 더 노력해 볼만 하다는 느낌을 갖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영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고문은 “한국의 기부는 미국의 2.2%에 비해 0.8%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국제통계연보에는 개인기부와 법인기부를 합쳐서 볼 때 증가 추세라는 점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과 자아실현 및 시민의 사회적 책임을 가짐으로 사회 통합이 가능하다”며 “국민 개인 한 사람 한사람이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피력했다.

오 고문은 “나눔의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기부문화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은 “나눔운동은 착한 마음으로만 하기보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체계를 갖추어 하면 끊임없이 계속돼 확산되는 운동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기증하고 자원봉사를 할 의사는 있는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방법을 시스템화해 물 흐르듯이 원하는 사람은 다 나눔공동체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범사회 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은 “나눔확산을 위해 생활 속의 쉬운 나눔, 사회적 인정 강화,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모금 기관의 신뢰성 제고, 나눔국민운동 전개 등 5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그간의 나눔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추진할 나눔정책은 ▲나눔의 제도화 ▲생활 속의 나눔문화 확산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나눔환경 구축 등이다.

한편 광대석 CJ 나눔&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상생과 나눔을 위해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광대석 사무국장에 따르면 사회복지 민간재원의 핵심인 기업은 2010년 약 2조8735억 원이 사회공헌활동 예산으로 사용됐다. 이는 전년대비 8.4%가 증가했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이 직접 참여한 실적은 2008년 45%를 차지했던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2010년에는 총액 7513억 3900만 원 중에서 51.1% 인 3842억3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광 사무국장은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사차원의 봉사조직, 표창제도, 봉사자 등록제도, 휴가제도, 교육프로그램 등을 도입해서 기부와 나눔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기업들의 나눔과 기부활동의 외부저해요인으로 사회적 인식부족(26.4%), 반 기업정서 등 외부의 왜곡된 시선 및 보도(24.8%)가 전체의 5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제도적 지원 부족(22.9%),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외부의 압력과 요구(18.4%), 법제도의 문제점(6.6%), 기타(1.0) 등으로 나타났다.

광 사무국장은 “이러한 조사를 분석해 보면 기업의 나눔과 기부활동에 대한 시민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평가 그리고 정부의 행정적인 지원이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다”고 주장했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등록일:2011-12-20/수정일:2011-12-23



선진사회복지회,나눔 주체 토론회 개최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하는가’- 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강철희 교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가 주제발표를 한 후 강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국장, 광대석 CJ나눔 사무국장, 안명옥 전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시사in저널

[뉴스시스아이즈] 이슈진단 **NEWSisEYES**

‘기부문화가 세상을 바꾼다’-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확산 불구 아직 미미

기사등록 일시 [2012-01-09 09:08:44]

【서울=뉴스시스】 이득수 기자 = 역사 저술가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제국이 1000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존속할 수 있었던 힘은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서 나왔다고 그의 세계적 베스트 셀러 ‘로마인 이야기’에서 갈파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유럽에서 귀족들이 부와 특권을 향유하는 것만큼 사회

와 국가를 위해 도덕적 의무를 다한다는 의미이다. 귀족계급이 사라진 현대에는 사회 지도층이 자신들이 누리는 것만큼 사회에 봉사하고 환원하는 행위를 뜻한다.

유럽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미국으로 건너가 꽃을 피웠다. 카네기, 록펠러 등 대부호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해 설립한 비영리 자선사업 재단은 오늘날 미국 부자들의 사회적 책임이행과 공헌의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록펠러 재단과 카네기 재단은 기아문제 해결은 물론 학문과 문화발전, 신흥국 원조에까지 활동영역이 광대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 멜린다는 ‘빌 &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만들어 저개발국가 복지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 최고 부자의 한 사람인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은 빌 게이츠와 함께 억만장자들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공익재단에 기부하자는 운동인 ‘기빙 플레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여기엔 블룸버그통신을 만든 뉴욕시장 마이클 블룸버그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등 미국의 부자 기업인 7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버핏은 개인재산 58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0억 달러를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한 바 있다. 버핏은 “부자들의 돈은 사회에 돌려줘야 할 보관증”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부자들이 시장경제 체제에서 더 많은 혜택과 과다한 몫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있던 사회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에는 5만6000여 개의 자선재단이 있으며, 미국인들의 98%가 기부에 참여한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부문화가 폭넓게 뿌리를 내려 생활화하고 있다. 총 기부액의 77%가 소액기부금이다.

매년 연말이면 구세군 자선냄비와 종소리는 거리의 연말풍경을 연출한다. 경기가 침체해 먹고사는 문제가 팍팍해진 올해에도 자선냄비를 통한 얼굴 없는 천사들의 기부가 마스크를 장식했다. 지난달 4일에는 거리의 모금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1억1000만원짜리 수표가 나와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으로 소개되며 세상을 놀라게 했다. 같은 달 20일에는 90대 노부부가 1억원짜리 수표 2장을 구세군본부 본영을 찾아와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부탁하며 전달했다.

전주 노송동에서는 2000년 이후 12년째 얼굴 없는 천사가 찾아와 5024만2100원을 맡기고 사라졌다.

이러한 익명의 기부자들로 인해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나눔으로 서로 감싸며 희망을 잃지 않게 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국세청의 세액공제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우리나라의 2008년 기준 총 기부금액은 8조9100억원으로 2001년 4조6700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연말소득공제 자료를 통해 파악한 1999년 기부금 총액이 2조9000억원이었으므로 10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GDP 대비 총 기부금액의 규모는 0.8% 정도로 미국의 2.2%에 비해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최근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창립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토론회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봉사 하는가?’에서 주제발표를 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철희 교수가 밝힌 내용이다.

강 교수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개인기부금 총액은 0.54%로 미국의 1.67%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았으나 영국 0.73%, 호주 0.65%에는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비율은 60대40이다. 미국이 95대5로 개인 기부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종교별로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순으로 기부참여율과 평균 기부 금액이 높았다. 기부자들은 기부금의 사용 희망 분야를 ‘자선 및 사회복지 분야’ ‘지역사회 발전’ ‘의료분야’ ‘해외구호활동’ ‘교육 및 연구 활동’ 순으로 꼽았다.

강 교수는 2009년에 실시한 ‘부유층의 기부 관련 연구’ 결과도 발표했는데, 이 조사는 유동자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부유층 68명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 방식으로 수치를 얻어냈다. 이 가운데는 자산 50억원~1000억원대를 보유한 부자도 포함돼 있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부유층들은 기부의 의미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답변(복수 답변 허용)이 63.6%로 가장 많았고, ‘개인의 가치 및 자아 실현’(50%), ‘사회정의 및 사회통합 수단’(39.4%) 순으로 답변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기부를 경험한 이들은 전체의 95.5%로 대부분 기부를 해본 사람이 참여했다. 가장 보편적인 기부처는 자선단체 및 사회복지기관(88.9%), 교육기관(33.3%), 이웃(28.6%), 정치단체(23.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3년 동안 평균 1억1500만원 정도를 기부했으며, 향후 기부를 계속할 의사가 있고, 유산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도 약 10%였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기부행위 의미를 ‘사회적 책임 이행’과 ‘개인의 가치 및 자아실현’ ‘사회정의 및 사회통합 수단’ 순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자들의 기부행위가 일상화하고, 동기 자체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개인들의 기부금액이 국가 전체의 기부금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미국의 경우 전체 기부규모 중 개인이 75%, 재단이 13%,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이 7%를 차지해 개인의 비중이 거의 대다수이다. 개인 기부 중에서 상위 1~5%에 속하는 부유층의 기부금액은 전체 금액에서 35%(상위 1% 부유층)~50%(상위 1~5% 부유층)나 된다. 부자들의 기부금의 비중이 절대적인 수치를 점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에서는 소득 상위 1~5%의 정확한 자선기금 출연 통계는 없으나, 관계자들은 “아마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부자가 적고, 기부금액도 선진국에 비해 낮을 것”이라고 말한다.

기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실은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돈 많은 거액 기부자는 이견희 정몽구 이종환(삼영기업 회장) 이명박 안철수 등 몇 사람 되지 않으며, 대부분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견희 회장은 2008년 사재 8000억원을 사회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 일가와 삼성 계열사가 설립한 장학재단 기금 4500억원, 이 회장의 막내 딸 윤형씨가 남긴 재산 3500억원을 출연한다는 것이었다. 아직 구체적인 진전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난해 4월 삼성경제연구소에 ‘사회공헌연구실’을 만들어 실현방안을 찾고 있는중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2006년 비자금 사건에서 특별사면되면서 7년 동안 사재 8400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순수 개인기부로선 사상 최대 규모인 5000억원을 ‘해비치사회공헌문화재단(현대차 정몽구 재단)’에 기탁했다. 저소득층 자녀 8만 명에게 사회적 계층 이동을 위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데 사용한다고 목표를 밝혔다.

정몽준 의원도 지난해 8월 범현대가 오너들과 함께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사재 2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대선 당시 BBK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가 불거지자 재산의 사회환원을 발표하고, 취임 2년차인 2009년 8월에 331억원을 출연해 자신의 호를 딴 청계재단을 설립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지난해 10월15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안철수연구소 주식의 절반(당시는 1500억원 상당, 현재는 2500억 원대)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해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같은 재벌가와 대선주자급 지도층의 기부행위는 우리사회에 기부문화 확산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정부가 예산으로 빈민을 구제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소액기부문화가 확산되어야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기부참여율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의 제고, 사회통합이라는 목표가 실현된다”고 말한다.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기부문화는 상류층, 사회지도층의 거액 출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기부 참여가 확산되어야 한다. 지금도 액수는 많지 않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낸 소액 기부금액이 모여 수 조원의 큰돈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기부참여율이 높아야 함에도 2007년 68.6%였던 개인 기부 참여율이 2009년엔 55%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국민 2명 중 1명이 기부하고 있지만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70~80%대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개인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기부가 확산돼야 따뜻한 사회, 함께 사는 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leeds@newsis.com

※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즈 제260호(1월16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칼럼] ‘소통’ 잘 해야 한다!

[2012/03/02 14:47:00]

이 정 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화가 정체되어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울화통이 터진다’라는 말을 사용한다. 장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고착되어 가고 있는 소득 양극화 등으로 불만과 불안,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자기들의 이야기, ‘아픔을 제발 들어 달라’고 했지만 별로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2040’들의 울화통이 터지

선거 당락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이들과의 소통을 뼈저리게 느낀 정치권은 그들과 소통을 위해 SNS도 활용하고 북콘서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 소통을 하겠다고 난리들이다. 이유야 어떻게 되었던, 무슨 목적이든 소통을 하고자 나선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소통이 무엇일까? 소통이 왜 필요할까?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와 소통을 해야 할까? 소통에 대한 이러한 질문들을 해 보게 된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라는 중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소통을 위해 SNS 역량지수를 만들고 당장 4월 총선에 ‘SNS 활용 능력’을 공천에 반영한다고 한다. 예비후보들은 부랴부랴 뒤 늦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팔로우와 친구를 늘리기 위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한편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소통을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현장을 가보고 현장의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야 할 시간에 소통을 한답시고 스마트폰을 수시로 들여다보고 댓글을 다는데 적지 않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모습들이 달갑지만은 않다.

소통을 위해 정치인, 정치 지망생들이 SNS에 올린 글들을 보면 하나 같이 듣기보다 나의 생각, 나의 말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다. 어디에 갔고 무슨 행사에 참석했고 누구를 만났다는 이야기 등 신변잡기 같은 내용을 알리는 것이 주류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아직 소통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방법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통’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들어 주는 것’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이 되었던 한 드라마 대사가 생각난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손을 오그라들게 한 이 말 한마디에 시청률이 경천 뛰었다.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작년 한해 베스트셀러 종합 1위 책이다.

이 둘은 SNS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너의 아픔에 내가 어떤 눈높이와 자세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내가 아닌 ‘너’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진지하게 듣고 공감하고 있다. 비록 아픔을 직접 대신해 주지는 못하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진정성이 서로에게 통한 것이 인기를 얻게 된 비결이라고 본다.

말, 즉 소통이 되지 않아 먹통이 되고 불통이 된 정치인, 정치권은 국민들, 유권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외면을 당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개그의 소재가 되어 조소거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소통부재는 비단 정치인, 정치권의 문제만이 아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게,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기득권층은 그렇지 못한 계층에게 더욱 귀 기울여 많이 듣는다면 절로 가슴이 열려 말(言)이 通하고, 생각이 通하고, 행동이 通해 자연히 배려와 양보로 소통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통을 하기 위해서 ‘3소’를 잘해야 한다고 한다. ‘옳소’, ‘그렇소’, ‘맞소’ 이는 상대를 인정해 주고 상생을 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지금은 선거철이다 보니 유권자 한 표, 한 표가 아쉬운 그들이다.

그래서 다들 소통하겠다, 낮은 자세로 듣겠다고 난리들이겠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를 일이다. 부디 유권자 눈높이에서 듣고자 했던 초심의 자세를 잃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공감연론
뉴스시스 NEWSis()

[뉴스시아이즈] 이슈진단 ‘경제민주화, 잠룡들의 여의주?’

— 이준영 서울시립대 교수가 말하는 ‘경제민주화’

【서울=뉴스시스】 이득수 기자 =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연결지은 논문이 나와 주목을 받았다. 저자는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 이 교수는 학부(고려대)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석사와 박사학위는 사회정책학(독일 쾰른대학)으로 받아 경제정책과 복지 문제를 한데 아우르는 고찰을 심도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는 평을 듣는다.

이 교수는 지난달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사회복지와 경제정책의 관련성에 대해 “한 인간이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거나 또는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충분한 소득을 획득하지 못하게 될 때 국가가 개입해 자원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로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경제민주화는 개인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교수를 만나 경제민주화의 역사적 배경과 향후 지향해야 할 추진 방향 등을 들어봤다.

- 경제민주화는 역사적으로 19세기 말 영국의 ‘산업민주주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산업민주주의 및 경제민주화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 변화돼 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 “산업민주화는 영국에서 산업화로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본가에 대한 힘을 강화해 노사문제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 그 후 산업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노사관계의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본래의 문제인 생산수단의 사적인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는 입장도 있었다. 이 후 독일에서 산업민주화의 개념을 경제 전체에 확대 적용하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체계화됐고, 이는 노사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까지도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요즘 각 정당과 대선 후보마다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있다. 왜 이 시점에 경제민주화가 대두하게 됐는지, 이처럼 경제민주화가 대두된 배경엔 우리 사회에 문제가 내재돼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 현 정권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친 기업적 정책을 표방하고 부자들에 대한 감세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실제로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를 유지 또는 확대하고 감세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로 경제가 활성화됐다면 경제민주화의 논의가 불필요했을 것이다.
- 그런데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동시에 불황을 맞게 됐고, 기대하던 경제 활성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단지 일부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만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기록했고, 그에 비해서 민들의 생활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재벌들의 높은 실적은 각종 특혜와 불공정거래를 묵인하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 영세상인 그리고 서민들의 희생과 고통으로 달성된 것이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높다. 따라서 공정한 분배를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즉,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경제민주화가 이뤄내야 할 목표는 무엇인가.
- “경제민주화의 목표는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 등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이해당사자의 참여기회가 인정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노동시장, 상품시장, 금융(자본)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가격, 이자 그리고 임대료 등에 관한 것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해 단지 시장의 지배력에 의해 의사결정이 주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 경제민주화가 완성되기 위한 사회적 토대는 무엇이며, 경제민주화 완성을 위해 사회 각 주체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국가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심판자로서 공정한 경기(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일반 대중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용이하진 않다. 시민단체 등에 소속돼 불매운동, 캠페인 등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 모든 결정은 법과 정책에 의해 결정되며, 대중이 법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투표라는 정치적 방식이 주가 된다. 따라서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여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 경제민주화와 국민 삶의 질의 상관관계는.

“경제의 비민주성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는 이론적 메커니즘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절대 빈곤층 문제는 성장 제일주의의 결과다. 경제민주화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재벌기업의 횡포나 소득의 불균형 등 분배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국민 삶의 질을 다양한 참여 방식을 통해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밖에 이 교수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경제적 현상을 지적했다.

자유시장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전경쟁이 이뤄진다’는 이론은 결과적으로는 허구이며, 최종적으로는 최강의 경쟁력을 갖춘 자가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독점 기업은 독점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용납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경제민주화는 모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기본으로 하지만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은 결국 독점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우수한 상품을 값싸게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이 다른 모든 기업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게 되는 것이 바로 자유경쟁이 기대하는 바일 것이다. 국민경제의 입장에서 자원도 항상 부족한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곳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태적인 관찰일 뿐이다. 동태적인 관점에서 진정한 의미로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생산방식을 발견한 새로운 도전자에 의해 기존의 독점이 파괴될 때 가능하다. 과연 시장경제 스스로 이러한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한번 독점하게 되는 기업은 그 지위를 잃지 않으려고 시장 지배력을 활용 또는 남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은 기업들만 있다면 경제민주화는 필요가 없게 된다. 결국 시장경제 스스로는 자유로운 공정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자유를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개입과 규제는 불가피하다.”

경제주체들 간에 공정한 게임이 진행되기 위해선 심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페어(Fair)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속 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묻혀버린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도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고발을 해야 비로소 수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leeds@newsis.com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보험료 부과체계 일원화 해야...

윤희성 기자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살피고자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이 발표를 맡았다.

신영석 부원장은 현재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부과체계의 이원화’를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2002년 재정통합으로 단일보험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과체계는 여전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 있는 상태. 신영석 부원장은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등이 참가했다.

한국보험신문

소득 차이 10배, 보험료 차이는 3.5배 직장가입자 부담능력 등까지 확장해야

건강보험이 2002년 재정통합을 끝으로 단일보험체제로 변경됐지만 부과체계의 문제점 때문에 형평성이 결여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열린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간 부과요소, 지역간 자격, 지역간 소득 산정 기준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납입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원수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불공평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거의 다르지 않으나 특수형태의 자영업자로서 사업소득에 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는 역진성을 가지고 있다. 600만원 과세소득자의 소득 등급별 점수는 380점, 6000만원의 소득자의 점수는 1336점으로 소득이 10배가 증가했는데도 점수는 불과 3.5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면서 “소득체계에 따른 보험료 부과에 형평성이 여전히 결여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보험료의 부과체계는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산정절차도 복잡하며 부과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된 종합점수를 다시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적용시켜 최종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어 세대원의 전출입에 따른 보험료 변동 등에 관한 민원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신 연구원은 “전 국민적 차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소득자와 지역소득자의 구분이 없는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현행 임금소득에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2중으로 사용됐던 재산을 한 번만 사용하되 부과요소로 계속 활용하고 자동차는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대표 보험신문〉

한국보험신문 류현승 기자

Yakup.com

최재경 기자 | cjk0304@yakup.com 입력 2012-10-25 15:01 최종수정 2012-10-25 16:0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2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주최하는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부원장은 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으로 ‘부과체계의 이원화’를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2002년 재정통합으로 단일보험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과체계는 여전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 되어 있다. 이에 직역간 이동시 보험료 차이가 크고 실직에 의해 소득 감소에도 재산 등의 이유로 보험료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

또, 직장가입자격 취득대상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됨에 따라 고소득 전문직종의 사업자가 직장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산 보험료를 회피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 내에서도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 기준이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부담하는 불공평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은 일반 근로자와 거의 다르나 특수형태의 자영자로서 사업소득에 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역진적 부과구조로 설계되어 600만원 과세소득자의 소득 등급별 점수가 380점이나 6,000만원의 소득자의 점수는 1,336점으로 소득은 10배가 증가하였으나 점수는 불과 3.5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유사하게 재산의 경우도 1,000만원 재산 보유자의 점수는 66점이나 1억 보유자의 점수는 439점으로 재산이 10배 증가해도 점수는 6.6배 증가에 그치고 있다.

부과체계도 복잡해 지역보험료의 부과체계는 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산정절차도 복잡하며 부과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또 각 부과요소별로 산정된 종합점수를 다시 부과표준

소득점수표에 적용시켜 최종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개인별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세대원의 진출·입에 따른 보험료 변동 등에 관한 민원에 대해 국민을 이해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 부원장은 전 국민적 차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소득자와 지역소득자의 구분이 없는 통합된 보험료부과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계별로 진행해 1단계(단기)에서는 현행 부과체계 문제점 중 일부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되 최종 부과체계를 감안하여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2단계(중장기) 부과체계에서는 전 국민 대상 단일부과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제안했다.

부과요소는 단기적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현행 임금소득에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까지 확장하고, 지역가입자는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게 2중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을 한 번만 사용하되 부과요소로 계속 활용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동차는 부담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적절치 않으므로 제외하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과 연령을 기본보험료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중장기로는 단일 부과체계적용을 위해 소득기준의 부과체계와 소득외 기본 보험료 등 기타요소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보험료 재원 확보를 위해 재원확보 다양화 방안을 강구, 건강보험재정을 소득세 성격의 보험료에 의존하는 대신 정부의 지원금인 국고지원의 비중을 상향 조정해 조세수입을 각 세원에 분산할 경우 각 세원에 대한 세율이 낮아져 후생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부원장은 “후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지금보다 조세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조세의 비중을 확대하면 지금보다 고연령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저연령층의 부담은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is()**

“정부가 건강보험에 국고지원 확대해야 “

| 기사입력 2012-10-25 18:33

【서울=뉴시스】한정선 기자 =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나날이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의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가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마련한 세미나에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지난 2010년 33.9조원에서 오는 2020년에는 87.4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제성장을 둔화로 임금을 바탕으로 한 보험료 수입 확대가 어려운 만큼 정부의 국고지원 비중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신 부원장은 합리적인 건강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직장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현재처럼 임금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금융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대상에서 형제 자매를 제외함으로써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부원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자동차를 생계유지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면서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 보유 여부를 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jsh@newsis.com



선진사회복지연구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토론회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25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자세한 문의는 연구회(070-8793-5202)로 하면 된다. 박영신 기자



“건보, 사회보장화…보험료 치중 탈피, 변화 필요”

부과체계 개편 공감…“지출 측면 관리 동시 담보돼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의식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이 보험을 넘어 사회보장의 성격으로 진화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체계 개편과 재원비중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주최로 오늘(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향 및 재원확보 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과 조세비중 증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그 과정과 방법에는 다른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준우 강남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장은 피부양자 자격조건 강화와 지역 자동차 보험료 제외 등 단계적 적용에 찬성했다.

반면 김선희 한국노총 사회정책국장은 부과체계 단일화 시 직장가입자에 상대적 역차별이 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국장은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에는 동감하지만 과연 공정한 개편이 이뤄질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패널들은 안정적 건보재원 운용을 위해 건보료 비중보다 소비세 등 조세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재원 확보 논의와 함께 강력한 지출관리가 담보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준우 교수는 “지출 측면의 개혁을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의료장비와 병상 과잉공급 규제와 약제비 절감, 총액계약제 도입과 지역별 병상총량제, 주치의제도, 입원 수가 DRG 등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또한 “지속가능한 재원 운용을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마일리지 도입 등 지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선희 국장은 더 나아가 사회보장목적세 도입을 제안했다. 노인인구 증가 등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강보험이 사회보장화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세 재원 확충 차원에서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김 국장은 “조세는 기여여부에 따라 급여 혜택 자격이 부여되는 보험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부담금 대상자는 대기업과 제약사, 보험사 등으로 설정하되 아동과 임산부,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의 별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611-020289-871(외환) 예금주 :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저희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